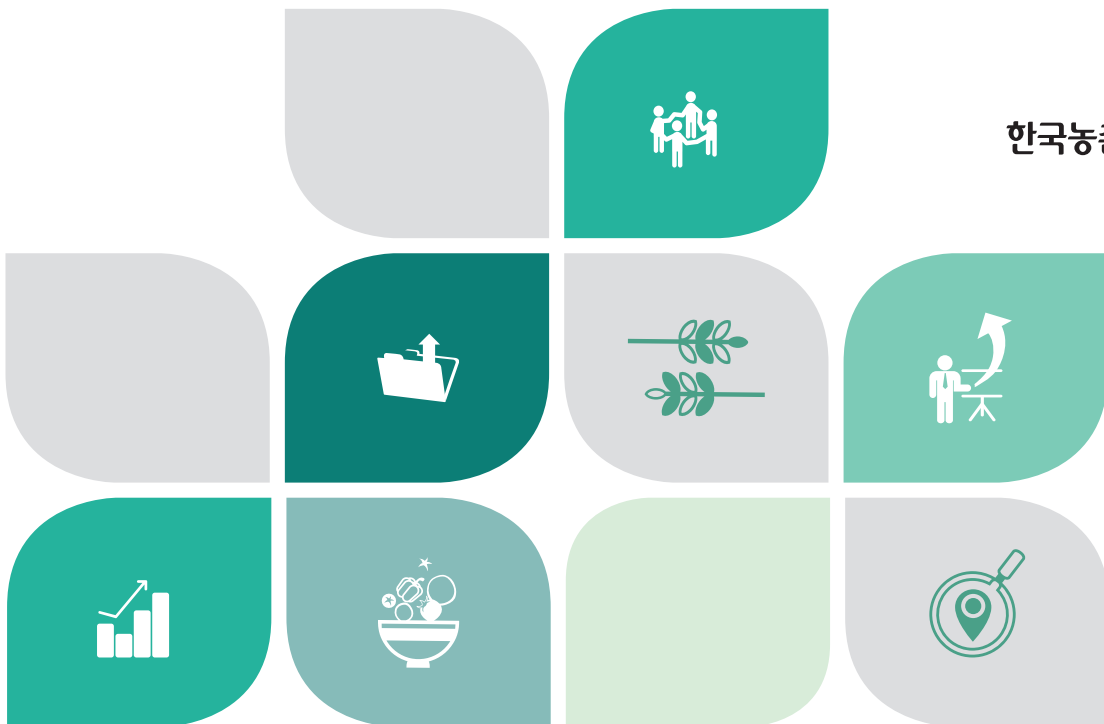


20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심재헌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광선 연구위원

정문수 부연구위원

김용욱 부연구위원

민경찬 연구원

유은영 연구원

김민석 연구원

나현수 연구원

손경민 연구원

유서영 연구조원



목차

CONTENTS

chapter I

일반 현황 / 1

chapter II

2021년 주요 업무 내용 / 11

1. 정책 점검·평가 업무

1.1. 20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15
1.2. 2021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33
1.3. 농어촌 영향평가	40
1.3.1.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41
1.3.2.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개선	47
1.4. 사전협의제도 도입 및 제도화 지원	50

2. 조사·연구 업무

2.1.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59
2.2.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67



2.2.1. 농촌 지역 학교시설 복합화와 정책과제	68
2.2.2. 도농 상생을 위한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방안 연구	72
2.2.3. 인구감소 시대,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방안 연구	74
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77

3.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지원 업무

3.1.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성·운영	85
3.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지원	90
3.3. 농촌 삶의 질 이야기 발간	92
3.4. 농촌 삶의 질 카드뉴스 제작	97



CHAPTER

I



일반 현황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소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정부 행정기관들의 협의기구이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농어촌 삶의 질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요 기능과 활동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촌 지역의 개발 촉진에 관한 비전과 정책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관련 시책을 종합하여 수립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심의, 추진 실적 점검·평가, 행정기관 간 협의 및 의견 조정을 담당한다.



- 2004.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포
- 2005. 4. 「제1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09.12. 「제2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10.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 2012. 4.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정
- 2014. 6.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회의 개최
- 2014.1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15. 7.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출범
- 2016. 1.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 2016.11.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 2017.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18.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9.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19.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서면)
- 2020. 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회의 개최 (대면)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20.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21. 5.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서면)
- 2021. 6.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분위원회 개최 (서면)
- 2021.11.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전문지원기관 개요 및 연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와 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립·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2. 제44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분석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 전문지원기관으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역할

- 농어업인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농어촌 환경 및 주민 정책 수요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높인다.
-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 농어업인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DB를 바탕으로, 다차원적인 분석 결과와 정보를 제공한다.
 - 분야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홍보·교육·컨설팅 등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 그 외에도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여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을 도시민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혁

- ▶ **20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2-217호(2012년 4월 19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 **2013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 **2014년**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 **201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재지정
(2015년 ~ 2019년)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85호(2015년 3월 17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출범(2015년 7월 1일)
·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출범(2015년 7월 21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5년 7월 21일)
· 삶의 질 향상 정책 대토론회 개최(2015년 12월 29일)
- ▶ **2016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6년 12월 23일)
- ▶ **2017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7년 12월 13일)
- ▶ **2018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연구(7개 부문)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8년 12월 19일)
- ▶ **2019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농어촌 지역정책포럼 개최(2019년 7월 2일)
·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 지원(2019년 9월 24일~26일)

- ▶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재지정
(2020년 ~ 2024년)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101호(2020년 2월 28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제26차 농어촌 지역정책포럼 개최(2020년 6월 30일)
- ▶ **2021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20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 2021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 농어촌 영향평가 실시
· 사전협의제도 도입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실시
· 2021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 202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우수 사례집 발간
· 제27차 농어촌 지역정책포럼 개최(2021년 10월 26일)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21년 12월 16일)



❖ 삶의질정책연구센터 개요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삶의 질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의 전담부서로서 2015년 7월 1일 출범하였다.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V.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

① 범부처 정책 협업 활성화

□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삶의 질 정책 지원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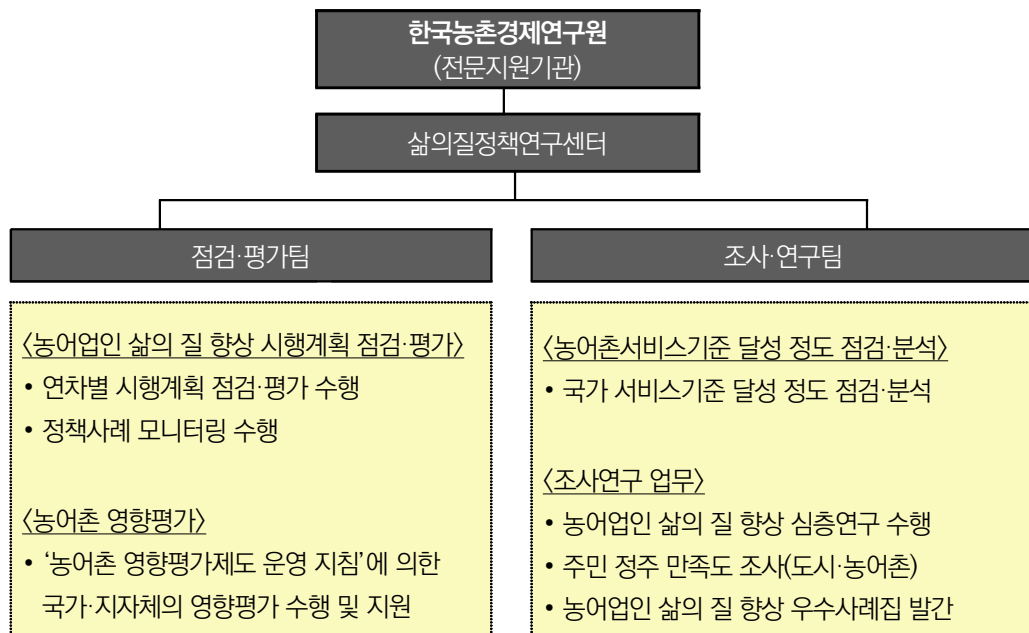
○ 전문지원기관(KREI 지정, '12.5.~) 내에 전담부서로 '삶의질정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시·도 연구원 등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15.3.~)

□ 주요 업무 및 조직구성

- 매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농어촌 영향 평가 등 특별법에 규정된 활동을 비롯하여 여러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기본계획 기간 중 연차별로 수립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과 성과 등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에 대해 부문별 세부 항목 달성 정도를 점검·분석하여 이와 연계된 지역 정책을 발굴한다.
 - (농어촌 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정책 중에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한다.
 - (정책 지원 네트워크 운영)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심층연구 수행, 정책 과제 발굴 등 삶의 질 정책과 관련된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관련 연구 경험과 성과를 확산시킨다.

- (기타 지원 업무)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집 발간과 정주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 운영, 컨퍼런스 개최, 삶의 질 이야기 포스터 발간 등 삶의 질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고 확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점검·평가팀과 조사·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CHAPTER

II



2021년 주요 업무 내용



1. 정책 점검 · 평가 입무

1.1. 20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1.2. 2021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1.3. 농어촌 영향평가

1.4. 사전협의제도 도입 및 제도화 지원

1.1. 20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 개요

- 「농어업인삶의질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 정부는 「농어업인삶의질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심의한 이후, 국회에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농어업인삶의질법 제5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추진 실적과 당해 연도의 계획을 3월 말까지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농어업인삶의질법 제6조).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같은 해 6월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농어업인삶의질법 제9조, 제4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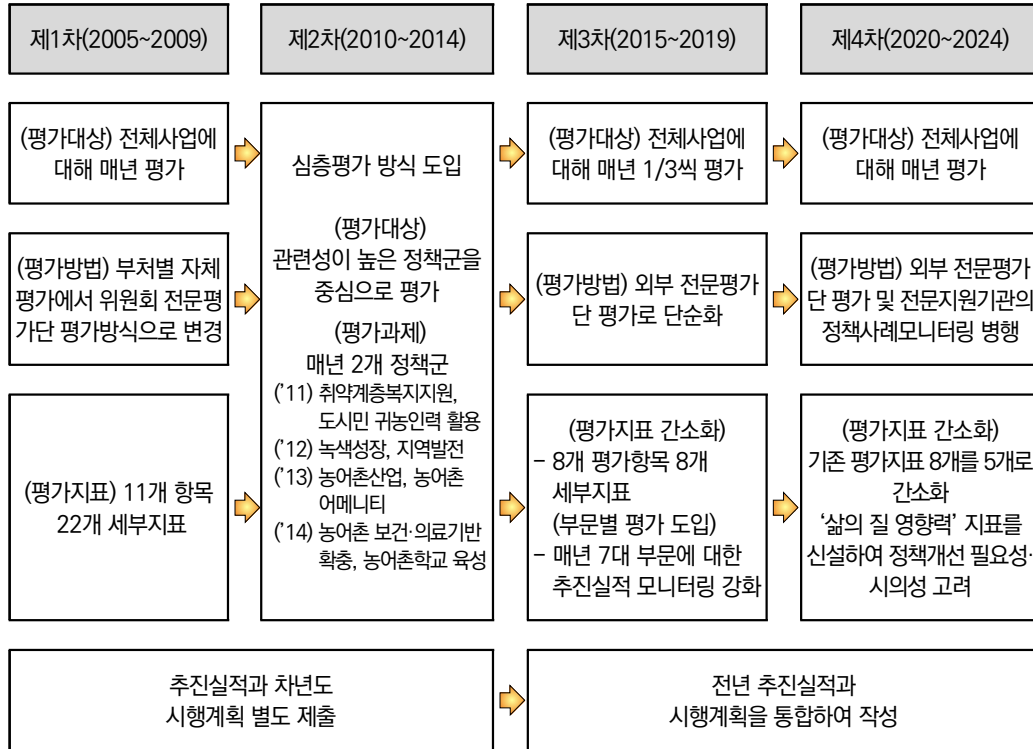
◆ 「농어업인삶의질법」에 의하면,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¹⁾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②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021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에서는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0년~2024년)’에서 제시된 시행계획 점검·평가 절차의 운영 방안을 반영하여,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정책환류 절차를 마련하였다.
- 2021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범위는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일자리의 4대 전략별 174개 전체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2020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총 178개 중 전년도 종료 사업 4개를 제외한 174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었다.

1) 시행계획 점검·평가에 대한 규정 및 자세한 평가절차에 대해서 「농어업인삶의질법」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를 참조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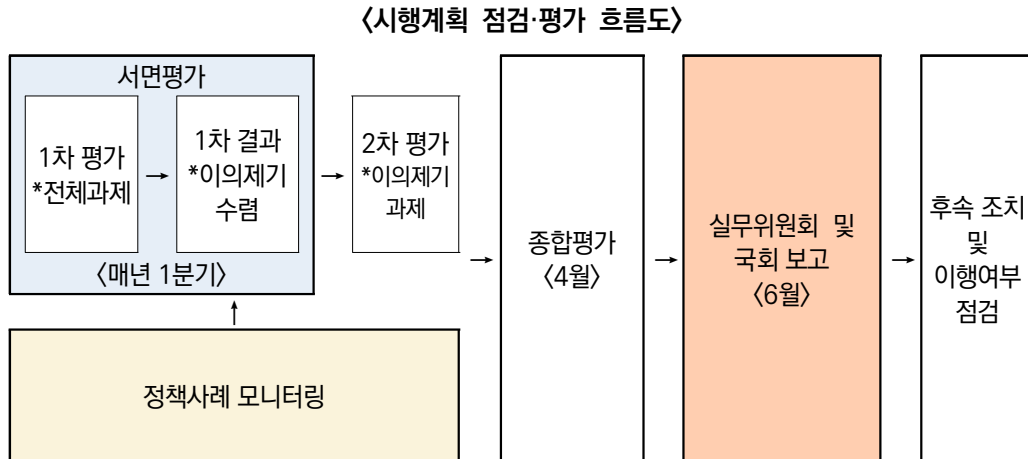
〈제1~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방법 비교〉



❖ 평가 방법

- (점검·평가 방식) 점검·평가를 서면평가와 정책사례 모니터링으로 구성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평가 결과의 정책 반응을 추진하였다.
- (평가단 구성)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참여 전문가,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각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43인의 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였다.
- (서면평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사업실적에 대해, 한 과제당 3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였으며, 과제별로 평균 점수를 도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서면평가를 진행하였다.
 - 점검·평가단 위원별로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평가과제를 배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과제별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 (종합평가) 점검·평가단의 각 분과별 분과장은 과제별 평가 결과와 전문지원 기관이 제시한 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평가 내용을 보완하고, 4대 전략별로 종합 평가 의견과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 (평가지표)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평가지표를 ‘1. 계획·집행’, ‘2. 성과’, ‘3. 환류’, ‘4. 영향력’의 4가지 부문, 총 6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1. 계획·집행’ 부문은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로 구성되며, ‘평가하는 과제의 목표가 기본계획의 목표와의 일치 여부’, ‘예산의 집행 비율 및 추진 일정 준수’가 각 항목의 평가 기준이 된다.
 - ‘2. 성과’ 부문은 ‘2-1. 성과 지표 달성’과 ‘2-2. 삶의 질 향상 기여도’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성과 지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비율’,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평가 점수를 도출한다.
 - ‘3. 환류’ 부문은 ‘3. 정책개선 노력도’ 평가 항목을 통해 ‘환류를 통한 정책개선, 관련 부처들의 협업,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평가한다.
 - ‘4. 영향력’에 대한 평가 결과는 평가 대상 과제가 농어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5개 등급으로 측정하여 제시한다.

〈2021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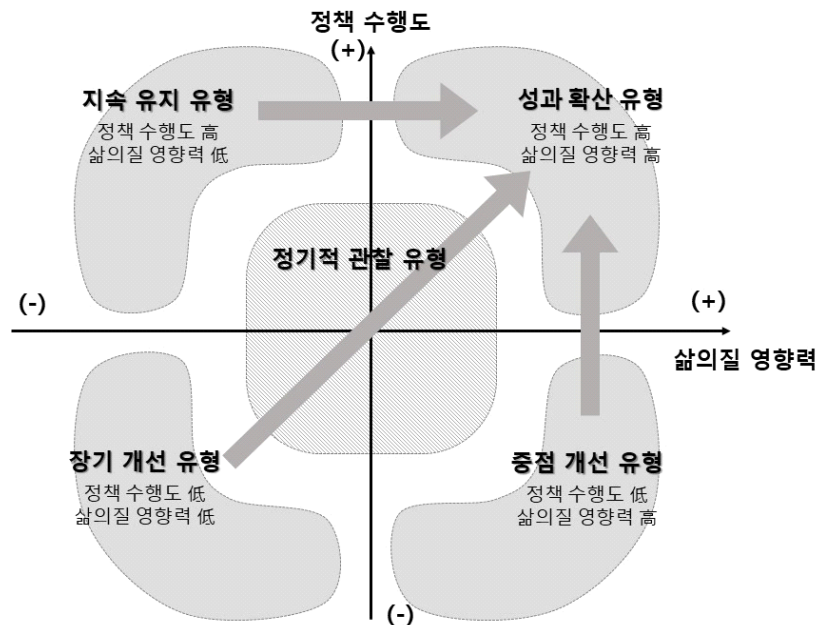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 수행도	1. 계획·집행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 사업 목적 및 삶의질 기본계획 간 정합성 • 농어촌 현실을 고려한 실행방식·추진체계 구축 수준	20점 (기본 12점)
		1-2. 예산 집행 및 일정 관리	• 예산 계획 대비 집행 수준 • 사업 일정 준수 정도	20점 (기본 12점)
	2. 정책 성과	2-1. 사업 실적	•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달성 수준 • 사업 성과지표 설정 정도	30점 (기본 20점)
		2-2. 사업 효과	• 삶의질 개선 효과 창출 정도 • 정책 효과 검증 객관성 • 정책 우수사례 도출	20점 (기본 10점)
	3. 정책 환류	3. 정책 개선 노력	• 제도 개선 노력 • 정책 수요자 의견 반영 및 참여 수준 • 사업 범위·규모 확대 노력 • 정책 홍보 노력	10점 (기본 6점)
	점수 총계			100점 (기본 60점)
삶의 질 영향력	4.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정책의 영향력		• 농어촌 필수서비스 전달 관련성 • 농어촌의 불리한 여건 개선 • 사업실행방식 개선을 통한 효과 제고 가능성	5점 척도

- (우수과제 및 개선필요과제)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전체 과제 중 ‘우수과제’와 ‘개선필요과제’를 선정하여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연간 보고에 활용하였다.
 - 정책 수행도 점수가 95점 이상인 과제를 ‘우수과제’로, 80점 미만인 과제를 ‘개선필요과제’로 제시하였다.
- (정책사례 모니터링) 서면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 성과가 미흡하거나 정책 시의성이 높은 과제를 별도 선정하여, 정책 실행 과정과 성과를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 서면평가 결과, 정책 성과가 미흡한 개선필요과제 및 점검·평가단에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과제를 정책사례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과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분류를 위하여, 삶의 질 영향력(Influence)과 정책 수행도(Performance) 개념을 바탕으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과제 유형을 분류하였다.

II. 2021년 주요 업무 내용

- 2021년도 점검·평가 세부 과제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별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영향력과 수행도 값을 표준화한 z점수(z-score)이기 때문에 각 과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상대적 비교만 가능하다.
- [성과 확산 유형](영향력 +, 수행도 +): 삶의 질 우수 정책 과제에 대한 이슈화 및 우수사례로서 전파가 필요한 유형을 의미한다.
- [중점 개선 유형](영향력 +, 수행도 -): 정책 실적 제고를 위한 중점적 관리가 필요한 유형이다.
- [장기 개선 유형](영향력 -, 수행도 -): 과제 전반에 대한 장기적 개선 추진이 필요한 유형이다.
- [지속 유지 유형](영향력 -, 수행도 +): 정책 실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삶의 질 기여도의 점진적 제고가 필요한 유형이다.
- [정기적 관찰 유형](영향력 및 수행도 1표준편차 이내):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취지 및 성과 개선 추진이 필요한 유형이다.

〈IPA(Influence-Performance Analysis) 개념도〉





❖ 평가유형별 특성

- 평가 결과 정책 수행도와 삶의 질 영향력을 기준으로 분류한 유형별 특성은 아래와 같다.
- 성과 확산 유형은 계획·집행, 성과, 환류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 중점 개선 유형은 계획·집행에 비해 성과 항목 점수가 낮았다.
 - 장기 개선 유형의 경우 계획·집행, 성과, 환류 모든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과제별 점수의 편차가 큰 것이 특징이었다.
 - 지속 유지 유형은 다른 항목에 비해 계획(사업목표, 내용적합성) 항목 점수가 다소 낮았다.
 - 정기적 관찰 유형은 항목별 평가 결과에서 두드러진 특성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각 유형의 항목별 평가 결과 특성〉

항목	구분	배점	성과확산	중점개선	장기개선	지속유지	정기적관찰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점수 표준편차	20	19.1 (0.78)	17.5 (0.94)	16.8 (1.67)	17.2 (1.18)	18.1 (0.91)
1-2. 예산집행 및 일정관리	점수 표준편차	20	19.2 (1.42)	20.0 (0.00)	18.7 (1.03)	18.7 (2.05)	19.3 (1.40)
2-1. 성과 지표 달성	점수 표준편차	30	28.2 (1.97)	28.3 (0.89)	26.3 (1.58)	26.4 (2.15)	27.8 (1.27)
2-2. 삶의 질 향상 기여도	점수 표준편차	20	18.5 (1.41)	17.1 (1.39)	14.3 (1.69)	14.1 (2.41)	15.9 (1.80)
3. 정책개선 노력도	점수 표준편차	10	9.6 (0.88)	9.0 (1.00)	7.7 (1.06)	7.3 (1.50)	8.3 (1.33)
합계	점수 표준편차	100	94.4 (1.21)	92.0 (1.49)	83.8 (1.70)	83.6 (2.26)	89.3 (1.40)

❖ 유형별 주요 평가 의견

○ [성과 확산 유형] 삶의 질 영향력과 수행도가 모두 높아 정책 성과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2021년 시행계획 과제 174개 중 성과 확산 유형에 포함되는 과제는 33개이다.

〈성과 확산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주요 평가의견
보건 복지	1-1-3-3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농어촌 정신건강관리 지원	90.7	5.0	-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예방,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와 사례관리로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확대 -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에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
	1-4-1-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96.7	5.0	- 농업종사 외국인 대상 지원범위 확대로 정책 만족도 향상 - 소득 및 자산 기준으로 지원이 제한되어 향후 개선 필요
	1-4-1-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96.7	5.0	- 농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보조하여 그동안 소외된 농민에게도 적용되도록 범위 확대 노력 - 청년, 여성 등 여전히 제외된 계층 대상으로 확대 적용 노력 필요
	1-4-1-3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91.3	5.0	- 어촌 지역 거주, 외국인 어업근로자에게도 건강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인상 등을 통해 기존 정책의 개선 노력 - 정책 홍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원활하게 협조하여 정책 효과성을 개선
	1-4-2-1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98.0	4.7	- 직장인(산재 가입 대상자), 겸업농 등 틈새 농업인 대상의 보장 범위 확대, 사망보험금 연장 특약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농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 달성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1-4-3-2 농업재해보험 사업 내실화	97.3	4.7	- 보험료 산정방식 개별화, 신규 품목 도입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으로 보험 가입률 대폭 증가 - 농작물재해보험 외 보험의 성과지표 개발 필요
교육 문화	2-1-1-5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94.7	4.7	- 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책개선을 위한 노력 추진 -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하며, 이에 앞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지, 인력 확보에 중점을 둔지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
	2-1-2-5 농어촌 방과후학교 내실화	90.7	5.0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열악한 정주 환경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해결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주요 평가의견	
교육 문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 • 강사지원, 필요한 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를 고도화할 필요	
	2-3-1-3	생활문화센터 조성	95.3	4.7	• 유희공간 리모델링 및 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참여·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2-3-2-1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95.3	4.3	• 전년도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한 경우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질적인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 고민 필요
	2-3-2-4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95.3	4.3	• 주민 주도의 참여형 문화 활동을 지원하면서 문화단체와 주민을 연계하는 다양한 노력 추진 •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문화단체를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필요
	2-4-1-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94.7	4.3	• 전체적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수혜 대상자들의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
	2-4-1-2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97.3	4.3	• 28개 지원 지역 중 인구소멸지역 등 농어촌 지역이 10곳 포함되어, 농어촌 소외지역을 배려하고 농어촌 특성을 사업에 반영 • 우수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파급효과를 확대할 필요
	2-4-2-2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96.0	4.3	• 유기적인 사업체계를 구축하여, 농경문화자원이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 주민 스스로 농경 자원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정주 생활 기반	3-1-1-1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95.3	5.0	• 과소마을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 도출 • 사업간 연계성 확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 제고 필요
	3-1-1-7	도서 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96.0	5.0	• 단순한 교통비 보조 뿐만 아니라 노선의 유지비용을 지원하여, 인구감소-수요감소-수익성 악화-노선 폐지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억제하는데 기여 • 현재 성과지표인 '보조금 집행률'보다 본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안정적 운항, 운임부담 완화 등)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변경 검토를 권장
	3-2-2-1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94.7	4.3	• 관련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농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공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초기 사업비

II. 2021년 주요 업무 내용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주요 평가의견
정주 생활 기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마련 지원 위해 선금 대출 한도 확대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자 노력 • 더욱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요구되며, 불량주택 정비율의 지속적인 저하 추세와 요인에 대한 조사·분석에 근거하여 정책개선 대안 마련 및 적절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
	3-3-1-2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94.7	4.3	•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 역량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의 자생적 발전 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 • 쇠퇴하는 농촌사회의 다양한 자생조직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지원 필요
	3-3-2-5 산불 예방 방지 대책	94.7	4.0	• 산불재난 안전 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였고,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개발하여 산불 신고체계를 구축 • 예산 규모의 확대 및 지속적인 추진 필요
	3-3-4-1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98.0	4.7	• 농어촌 중심지 외에도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용성을 높이고, 타 부처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
	3-4-1-4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② (연안여장 환경개선)	98.0	4.0	• 사업추진 절차와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지원조건이나 수혜자가 명확하고,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적극적 • 우수사례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생태계를 강화할 필요
	3-4-2-1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98.0	4.3	• 악취 저감이라는 직접적 불편을 해소해줌으로써 정책 체감효과가 우수하며 사업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 • 사업을 추진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필요
	3-4-3-5 축산분뇨 자원화 에너지화②	94.7	4.7	•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 • 제시된 성과지표만으로는 질적으로 충실하게 사업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판단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서 축산부문의 감축 비중을 감안할 때, 좀 더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
	3-4-3-8 친환경 양식 에너지 보급	94.7	4.3	• 어업인 경영개선과 탄소 감축에 따른 지속가능한 저탄소 생산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 필요 •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설의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 감축, 어업인 경영개선 등 다수의 혁신사례 도출 제언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주요 평가의견
경제 일자 리	4-1-1-1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융복합산업 창업지원 강화)	91.3	5.0	- 사업 예산과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절하게 수행 - 농촌 지역별 차별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
	4-1-2-2 푸드플랜 내실화 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90.7	5.0	- 영세농민의 안정적 판로확보,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정책개선과 관련한 연구 및 우수사례 도출 노력이 우수 - 성과지표로 직매장 운영 결과(매출액, 참여 농가 등)에 대한 지표가 추가될 필요
	4-1-2-3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	96.7	4.3	- 사업 추진방식이 적절하게 설계되어있고 정책 개선 노력이 우수 - 지역 내 관련된 특화센터 등과 연계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
	4-3-1-4 아이디어와 기술융합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지원	98.0	4.7	- 사업 대상자가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으로, 농어촌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적합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 설정 - 현재 성과지표는 점진적으로 향상된 목표치 제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 적정지표 산출을 위한 검토 필요
	4-3-1-5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	98.7	5.0	- 매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농지, 자금 등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사업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
	4-3-2-1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지원	98.7	5.0	- 귀농·귀촌, 청년 귀농, 귀촌인 등으로 사업을 세분화하여 사업내용과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설정 -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모니터링 필요
	4-3-3-7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추진	99.3	4.0	- 성과지표가 적극적이고 목표 달성 수준도 우수하며, 체감효과, 정책 개선 실적, 홍보 실적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충실히 제시 - 지원대상 선정조건과 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4-4-1-1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	96.0	4.3	- 수요자 의견수렴 기반의 정책 개선과 예산 확보 및 사업 대상의 확대 노력, 언론 홍보 노력이 우수 - 직업교육훈련 지원에서 농어업의 6차산업 취·창업 분야 강화 필요
	4-4-2-1 농촌 고용인력 지원	95.3	4.7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어려워짐으로써 농촌인력 조달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 - 영농 작업단 등 고령화된 농촌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농작업 체계 창출에 대한 관심이 필요

○ [중점 개선 유형] 영향력은 높으나, 수행도는 낮은 과제로서, 사업 수행도 제고를 위해 정책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 2021년 시행계획 과제 중 9개가 중점 개선 유형에 해당한다.

〈중점 개선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주요 평가의견
보건 복지	1-1-2-5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업안전 보건센터운영)	81.3	4.3	- 조사·연구 중심의 사업으로 그 결과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가 미흡 - 농업인 대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할지, 농업인 건강 예방 정책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할지 사업의 목표 설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
	1-4-3-5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 (여성경영주 등록확대)	84.0	4.7	- 여성농업인 정책 실무회의와 반상회 등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환류 노력 - 사업의 목적(출산급여 수급)과 수단(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등록) 사이에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재검토할 필요
교육 문화	2-1-1-6 농수산업 후계 인력 장학금	83.3	4.3	- 청년층의 어업 분야 및 어촌 유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의 구체성이 미흡 -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창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재고할 필요
	2-1-2-1 미래형 학교환경건축 (농어촌 고교 무선망 지원)	83.3	4.7	-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과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사업구조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필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 농어촌 초·중·고 학교 교실을 대상으로 한 성과달성 지표를 설정할 필요
	2-1-2-3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79.3	5.0	-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사업 운영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
정주 생활 기반	3-1-1-4 주민참여형 교통 모델 확산	78.7	4.0	- 공공형 버스 사업의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주민 만족도를 평가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이용자 수, 노선 수 등 사업 성과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 활용을 제안
	3-4-1-1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83.3	4.3	- 사업의 성과지표를 더욱 목표 지향적으로 설정할 필요 -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선 노력 필요
	3-4-3-10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79.3	4.0	- 사업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정책 수혜자인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
경제 일자리	4-3-3-4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71.3	4.0	- 주민의 필요성이나 이용현황 조사는 하였으나, 체감 효과를 확인할만한 객관적 내용이 부족 -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 진척 정도를 성과지표로 추가할 필요



- [장기 개선 유형] 장기 개선 유형은 영향력과 수행도가 모두 낮아, 정책 목표 수정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 개선 추진 필요한 과제들이 포함된다.
- 2021년 시행계획 과제 중 27개가 장기 개선 유형에 해당한다.

〈장기 개선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주요 평가의견
보건 복지	1-1-3-2 어업인 특수건강검진	80.7	3.7	- 건강검진 항목과 건강검진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연차별 사업 목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1-4-2-5 어업작업안전 교육 및 예방장비 개발 보급 지원	83.3	3.0	- 교육 및 연구개발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성과지표 변경 검토 필요 - 현재 성과지표로 제시한 교육 실적을 구체화하거나, 교육생 수를 추가하는 것을 권장
	1-4-2-9 소형어선 안전검사 단속 계도 활성화	82.0	2.3	- 선박 안전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활동 등을 조직하여 어업인과 어선의 안전 확보를 도모한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도출 - 평가지표 측정 산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1-4-3-3 어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양식어업재해보험 수지 개선)	88.7	3.0	- 가입률 목표를 매년 상향 설정해 정책보험의 효과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나,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저조 -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시할 필요
교육 문화	2-3-2-3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78.7	3.3	전국의 도시와 농어촌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 파악이 어려워, 농어촌 지역 수혜자 만족도 및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 필요
	2-4-2-1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80.7	2.3	- 실제 지방문화원에서 DB화한 자료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 현실 개선을 위한 적절한 실행 방식과 추진체계는 미흡 -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농어촌 지역의 소득사업, 축제, 관광 자원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내용과 체계 개선 필요
정주 생활 기반	3-1-1-5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철도연계교통 강화	86.7	2.7	철도 예매 어플리케이션 등 서비스 이용방식에 있어서, 고령자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필요
	3-1-2-5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84.0	3.7	- 지원 비율 확대 혹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모든 여객선에 교통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정책 수혜자인 섬 지역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제도 및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

II. 2021년 주요 업무 내용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주요 평가의견	
정주 생활 기반	3-1-2-7	해상교통관제구역 확대	84.7	2.3	• 사업은 선박의 안전운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VTS설치 후 해당 VTS 관리 구역에서 감소한 사고 실적(충돌, 접촉, 좌초)을 조사하는 것을 제안
	3-2-1-1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82.7	3.0	• 더욱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서는 불량주택 정비율의 지속적인 저하 추세와 요인 에 대한 조사·분석에 근거하여 정책 개선 대안 마련 및 적절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
	3-3-1-4	정주환경 및 농촌생활서비스 모니터링 기술개발	86.0	2.7	• 데이터의 활용 성과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에 미흡 •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 마련이 필요
	3-3-2-4	어항시설 안전관리 (어항시설 보강)	82.7	3.3	• 어항시설 보강 작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 책 마련 필요
	3-3-2-7	산림보호 지원	82.7	2.7	• 산림보호 활동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세부 사업 내용에 명시하여, 사업체계를 내실화할 필요
	3-3-3-3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76.0	2.7	•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적극성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사업 • 각 지자체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타 예산사업과 연계 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필요
	3-4-1-2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추진	83.3	3.3	• 캠페인 사업으로, 일부 사업이 형식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우려 •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 인식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
	3-4-1-3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① (해양폐기물 정화)	82.7	3.0	• 성과지표 달성도는 우수하나, 체감효과에 대한 객관 적 정보, 우수사례, 홍보 노력 등이 미흡 •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 마련 권장
	3-4-1-6	국민방제대 운영 확대 (해양자율방제대 운영 확대)	84.0	3.3	• 정책 수혜자인 어업인의 의견 청취 및 반영이 미흡 하며, 세부 추진 일정에 정책 및 제도 개선, 어업인 의 의견 수렴 등이 포함될 필요 • 서비스가 열악한 어촌 지역에서의 우수사례 발굴 필요
	3-4-3-11	해역별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및 해양경비정보 시스템 구축	80.0	3.0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관점에서는 간접적인 효과 가 나타나는 사업 • 정책 수혜자인 어업인의 의견 반영, 언론보도 및 홍 보 노력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필요
	3-4-4-4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①	80.7	3.3	• 농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치 않으 며, 우수사례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 • 지역주민들의 농업 유산 보전, 관리, 활용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 필요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주요 평가의견
일자리	4-1-1-2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80.0	3.7	- 수산식품 거점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필요 - 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적극적인 정책 홍보 필요
	4-1-2-4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①	75.3	2.7	- 세수 부족으로 사업이 일부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책 검증을 위한 연구나 제도 개선 노력, 정책 홍보 등 실적이 미비 - 모니터링 등 센터 건립 이후 정책 효과 검증 필요
	4-2-1-4 농촌관광 수요확대를 위한 디자인기술 확산	88.0	2.7	- 연구를 통해 개발한 정책 제안, 영농 활용, 지침서 등의 한계를 감안하나, 성과목표가 다소 평이하게 설정 - 연구 결과가 지침서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제도 노력 필요
	4-2-1-5 음식관광 활성화 (음식관광 상품개발 보급)	82.0	2.0	- 우리 음식에 대한 외국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성 미흡 - 음식관광 상품 개발과 시장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민간을 실행 주체로 연계할 필요
	4-3-1-2 농업법인 전문인력 채용 지원	82.0	3.0	전국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
	4-3-3-10 말산업육성지원	86.0	3.0	사업 예산 및 사업 대상 확대 계획이 다소 미흡하며 보도자료, 언론 홍보 등 정책 홍보를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
	4-4-2-2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83.3	3.7	사업 관리 측면에서 우수사례, 의견수렴 장치, 환류체계, 개선 노력 등이 다소 미비하여, 사업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4-4-2-3 외국인 노동자 적정배정 및 처우 개선	86.0	3.0	-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실행방식에 있어서 의심사업장 타깃 점검 방식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점검 방식 필요

○ [지속 유지 유형] 수행도는 양호하지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정책 목표 및 방향 수정이 필요한 유형이다.

- 2021년 시행계획 과제 중 과제 10개가 해당 유형에 포함된다.
- 보건·복지 전략 부문에서는 지속 유지 유형 과제가 도출되지 않았다.

〈지속 유지 유형 과제 목록 및 주요 평가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주요 평가의견
교육 문화	2-1-1-7	학교시설 안전 강화	90.0	3.0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연계를 포함한 사업추진 절차의 체계성 양호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세부 정책 발굴 필요
	2-4-1-3	문화이모작 (문화공동체 촉진인력 양성)	90.7	3.0	-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였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등의 우수사례를 도출 - 다른 유사 사업과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2022년부터 통합지원이 종료되어 향후 계획 수립이 필요
정주 생활 기반	3-2-2-4	농어촌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95.3	3.7	- 주민 대상 설문조사 시행,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 효과 분석, 우수사례 발굴 등 혁신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 - 농어촌 주민에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3-3-2-2	수리시설 안전관리②	92.0	3.0	- 재해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안전한 농어촌 정주 여건 조성에 기여 - 수요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확대 추진이 필요
	3-3-2-3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대책	90.0	3.0	- 상습 침수 농경지의 침수피해 해소에 기여하고, 수해자의 높은 만족도 도출 - 향후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풍수해에 대응하여 사업 규모와 범위의 확대 필요
	3-4-3-6	부산물비료공급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90.0	3.0	지방이양 사업이고, 유지질 비료 공급 사업으로 추진과정이 단순하여 사업실행방식 개선을 통한 효과성 제고 가능성 부족
	3-4-3-7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94.7	3.3	- 성과지표가 적극적으로 설정되고, 주민참여 방식의 실행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사업대상지에 대한 조건이나 사업추진 상에서의 주민 갈등 해소나 수요조사 등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
	3-4-4-6	농업·농촌 공익자원 관리 및 활용 기술 개발	89.3	2.3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 지역주민이 자발적 정주 환경 관리 및 보전 활동에 참여하여 정주 환경이 개선된 사례나 성과 제시 필요
경제 일자리	4-3-3-1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	94.7	3.7	- 수요자 의견 반영을 위한 설명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였고,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지표 설정 - 홍보 채널의 다양화 등 적극적인 정책 홍보 필요
	4-3-3-2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93.3	2.7	- 참여자 수, 현장 방문 수, 실천 농가 수 등에서 큰 폭의 실적 향상 달성 - 운영성과 제시가 미흡하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우수사례 창출 등 보완 필요



- [정기적 관찰 유형] 수행도와 영향력 모두 두드러진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 정기적으로 정책 실행 수준 및 운영 취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 2021년 시행계획 과제 중 과제의 절반인 95개 과제가 해당 유형에 포함되어 별도로 목록과 평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4대 전략별 평가 및 개선 방안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4대 추진 전략 〉

■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제시

- 전략 1: (보건·복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 전략 2: (교육·문화)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 전략 3: (정주생활기반)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 전략 4: (경제·일자리)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 보건·복지 전략 과제들은 당초에 제시한 성과 목표치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서, 향후 이 목표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보건·복지)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89.2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2등급이다.
 - 총 39개 과제 중 성과 확산 유형으로 분류되는 과제는 6개로, 부문 내에서 15.4%를 차지했다. 장기 개선 유형과 중점 개선 유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각각 4개, 2개였으며, 지속 유지 유형 과제는 없었다.
 - 보건·복지 전략의 정책군들 중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정책군의 정책 수행도 달성 정도가 가장 미흡한 만큼 해당 정책군의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 교육·문화 전략 과제들은 대체로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하였으나, 단순 예산 집행 정도, 수혜자 만족도 수준을 벗어나, 제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교육·문화)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89.6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3등급이다.

- 총 33개 과제 중 성과 확산 유형으로 분류되는 과제는 8개로, 부문 내에서 24.2%를 차지했다. 장기 개선 유형과 중점 개선 유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각각 2개, 3개였으며, 지속 유지 유형 과제는 2개였다.
- 교육·문화 전략 중에서도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정책군의 정책 수행도 달성 정도가 가장 미흡한 만큼 해당 정책군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정주생활기반 전략 과제들은 대체로 삶의 질 향상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내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사업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정주생활기반 전략)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89.1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3.8등급이다.
 - 성과지표는 4개 정책군에 사업들이 대체로 적극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직접적인 사업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공급 중심의 실적 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정책군에 속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등의 사업에서는 하드웨어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요구되며, 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계 일변도의 사업 방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 경제·일자리 전략 과제들은 코로나 지속 등의 여건으로 성과 목표가 일부 조정된 사업들도 있었지만 목표치는 보통 정도 수준으로 설정되었고, 대체적으로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하였다.
 -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경제활동·일자리)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89.5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3.9등급이다.
 - 총 37개 과제 중 24.3%를 차지하는 9개 과제가 성과 확산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장기 개선 유형 과제는 8개, 중점 개선 유형 과제는 1개였으며, 지속 유지 유형 과제는 2개 과제가 해당했다.
 - 경제활동·일자리 전략 중에서도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정책군의 정책 수행도 달성 정도가 가장 낮은 만큼 해당 정책군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부문별 점검·평가 주요 평가 수치 및 유형 분포〉

삶의 질 4대 전략 (과제 수)	평가 점수	영향력	성과확산 유형	중점개선 유형	장기개선 유형	지속유지 유형	정기적 관찰 유형	유형별 합계
보건복지 (39개)	89.2	4.2	6개 (15.4%)	2개 (5.1%)	4개 (10.3%)	0개 (0%)	27개 (69.2%)	39개 (100%)
교육문화 (33개)	89.6	4.3	8개 (24.2%)	3개 (9.1%)	2개 (6.1%)	2개 (6.1%)	18개 (54.5%)	33개 (100%)
정주생활기반 (65개)	89.1	3.8	10개 (15.4%)	3개 (4.6%)	13개 (20.0%)	6개 (9.2%)	33개 (50.8%)	65개 (100%)
경제일자리 (37개)	89.45	3.9	9개 (24.3%)	1개 (2.7%)	8개 (21.6%)	2개 (5.4%)	17개 (45.9%)	37개 (100%)
부문별 합계			33개	9개	27개	10개	95개	174개

1.2. 2021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 개요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별 국가최소기준을 의미하며,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설정하고 관리한다.
 - 도농 간 공공서비스 격차 완화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매년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의 4대 부문 19개 항목에 대한 달성 정도를 점검·분석한다.
 - 「농어업인삶의질법」에 근거하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세부 내용 및 목표치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명시한다.
 - 정부 부처 담당자 및 부문별 전문가, 농업인으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는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목표치 설정 및 조정, 달성 정도 점검, 개선 방안 등 제도 운용 전반에 관한 협의·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 제4차 기본계획(‘20-’24)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치 설정 및 분석 방법 등 제도를 개편하고, 4대 부문 19개 핵심항목에 대한 달성 정도를 점검·분석한다.
 -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 및 정부의 국가적 생활SOC 확충 기조를 고려하여 일부 항목(체육시설, 도서관, 생활폐기물)을 보완·신설하였다.
 - 국토부 기초생활인프라 기준을 반영하여 접근성 분석 방식을 도입하고, 6개 항목(진료, 영유아 보육·교육, 도서관, 초·중등교육, 문화, 체육시설)에 대하여 최소 접근시간 및 목표치 달성 주민 거주지 비율을 제시한다.

❖ 주요 추진 내용

▣ 2021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내용

- 서비스 항목은 도시와 농어촌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질에 관한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으로,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한다.



- ‘제4차 기본계획(‘20-’24)’ 수립에 따라 개편된 핵심 항목은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의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핵심항목에 대한 달성 정도를 매년 점검·분석하며, 139개 시·군의 중기 목표치 달성 여부도 함께 제시한다.
- 중기 목표치는 ‘제4차 기본계획(‘20-’24)’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하는 최종 목표치를 의미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통계청 승인 공식통계(11개)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자료(5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자료(10개)를 활용한다.

- 각 자료는 자료 수집 기간(2021년 9월~12월) 기준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 방법 및 수단〉

부문	서비스항목	세부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자료
1. 보건의료·복지	진료	내과	접근성 측정방식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데이터	공식 통계
		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응급의료		시·군별 119 구급대 현장 도착 평균 소요시간	소방청: 소방서별 119구급대 출동 소요시간 현황	협조 자료
	영유아 보육·교육	어린이집	접근성 측정방식 적용	보건복지부 보육기관과: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주소 현황 자료	협조 자료
		유치원	접근성 측정방식 적용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주소록	공식 통계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 ×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공식 통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공식 통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현황	행정 조사
				행정안전부: 65세 이상 노인인구	공식 통계
2. 교육·문화	초·중등교육		접근성 측정방식 적용	교육통계서비스: 초·중학교 주소록	공식 통계
	평생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비형식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읍·면 현황	행정 조사
	문화	문화예술 회관 및 지방 문화원	접근성 측정방식 적용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 총량):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공식 통계

II. 2021년 주요 업무 내용

부문	서비스항목	세부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자료
2. 교육·문화	도서관	도서관	접근성 측정방식 적용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식 통계
	체육시설		접근성 측정방식 적용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및 체육진흥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및 생활체육시설(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간이운동장) 주소	협조 자료
3. 정주 여건	주택	석면 슬레이트 주택지붕	{('14부터 '21년까지의 슬레이트 주택 철거 실적)/ '14 슬레이트 주택 수} × 100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실적 - 주택 철거·처리 분야	협조 자료
	상수도		(시·군별 면 지역 광역·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 지역 주민등록인구) × 100	환경부: 상수도 통계	공식 통계
	하수도		(군 지역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 군 지역별 인구) × 100	환경부: 하수도 통계	공식 통계
	난방		(읍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 × 100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협조 자료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 수 / (읍·면 지역 총 가구 수 -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 × 1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LPG산업협회)	협조 자료
	대중교통		(도보 15분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운행 3회 이상인 법정리 수 / 총 법정리 수) × 100	산림빅데이터 버스노선 정보	협조 자료
			도서 지역 여객선 운항 현황	해양수산부: 도서별 여객선 이용실적	협조 자료
	생활폐기물	영농 폐기물 처리장	(영농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동집하장 정보 목록 조회	공식 통계
		생활 폐기물 처리장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지자체조사: 행정리별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및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현황	행정 조사
	방범설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지자체조사: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행정 조사
4. 경제 활동	경찰순찰		주민이 요청하는 순찰시간·장소에 대해 1일 1회 이상 탄력순찰 여부	경찰청: 시·군별 탄력순찰 대상 지역 및 탄력순찰 실시 현황	협조 자료
	소방출동		(시·군별 목표시간내 도착 건수 / 총 출동 건수) × 100	소방청: 각 시·군별 화재 발생 장소 및 출동거리	협조 자료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시·군별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지자체 조사: i) 창업지원센터 유무 ii) 일자리지원센터 유무 iii) 전담인력 고용 여부 iv) 전문프로그램 운영 횟수	행정 조사



▣ 2021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결과

○ 보건의료·복지 부문은 모든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 진료 항목의 달성 정도는 22.7분으로 전년 대비('20년 23.3분) 향상되었으며, 4대 중요 진료과목에 대한 달성 정도 분석 결과, 내과 18.5분, 외과 21.6분, 소아청소년과 24.5분, 산부인과 26.0으로 목표치(30~60분)를 모두 달성하였다.
- 응급의료 항목의 달성 정도는 '20년 20.5분에서 '21년 14.6분으로 전년 대비 시간이 단축되어 달성 정도가 향상되었으며, 목표치(30분) 또한 달성하였다.
-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은 '20년 기준 5.8분에서 '21년 9.0분으로 전년 대비 달성 정도가 감소하였으나, 목표치(10분)는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복지는 항목의 달성 정도는 100%로 전년(99.3%)보다 달성 정도가 향상되었고, 목표치(80%) 또한 달성하였다.

○ 교육·문화 부문은 모든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 초·중등교육 항목은 목표치(10분)을 달성하고, '20년 7.5분에서 '21년 7.3분으로 달성 정도가 약간 향상되었으며, 통학 수단 제공 여부는 교육청 자료 미제공으로 점검이 불가능했다.
- 평생교육 항목의 달성 정도는 목표치(70%)를 충족하였으나, '20년 기준 88.2%에서 '21년 79.1%로 다소 감소하였다.
- 문화 항목은 '21년 24.0분으로 전년(24.7분) 대비 시간이 단축되어 달성 정도가 향상되었으며, 목표치(40분)를 달성하였다.
- 체육시설 항목은 '20년 18.8분에서 '21년 17.0분으로 접근시간이 단축되어 달성 정도가 향상되었으며, 목표치(30분)를 달성하였다.
- 도서관 항목은 '20년 10.3분에서 '21년 9.9분으로 접근시간이 단축되어 달성 정도가 향상되었고, 목표치(10분)를 달성하였다.

○ 정주여건 부문에서는 주택, 난방, 방법설비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했으나,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 항목은 점검 방법이 변경되었으며, 환경부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및 연도별 석면 슬레이트 소재 주택 철거 실적 자료'에 근거한 달성 정도는

II. 2021년 주요 업무 내용

- 30.7%로 목표치(23%)를 달성하였다. 또한 2015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방식이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변경되어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 대한 조사는 통계자료 구축 불가로 달성 정도 점검이 불가능했다.
- 난방 항목 달성 정도는 '20년 68.1%에서 '21년 69.4%로 향상되었으며, 목표치(68%) 또한 달성하였다.
 - 방법설비 항목은 '20년 64.9%에서 '21년 71.3%로 달성 정도가 향상되었으며, 목표치(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수도 항목의 달성 정도는 '20년 77.0%에서 '21년 80.6%로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나 목표치(85%)에는 미달하였다.
 - 하수도 항목의 달성 정도는 '20년 71.8%에서 '21년 74.6%로 향상되었으나 목표치(76%)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 대중교통 항목의 달성 정도는 '21년 87.3%이며, 전년('20년 87.1%)보다 약간 상승하였으나 목표치(100%)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 생활폐기물 항목은 영농폐기물처리장 설치 읍·면 비율이 '20년 66.4%에서 '21년 75.0%, 생활폐기물처리장 설치 행정리 비율은 '20년 16.7%에서 '21년 18.8%로 향상되었으나 목표치(100%)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 경찰순찰 항목은 '20년 62.9%에서 '21년 90.8%로 달성 정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나 목표치(100%)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출동 항목은 '21년 점검 방식이 변경되었으며, 달성 정도는 64.9%로 목표치(70%)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 경제활동 부문의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의 달성 정도는 '20년 65.5%에서 '21년 68.8%로 향상되었으나 목표치(86%)에는 미달하였다.
- 2021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결과, 총 19개 항목 중 목표치를 달성한 항목 수는 12개, 달성하지 못한 항목은 7개로 나타났다.
- '20년 기준 11개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전년 대비 달성 항목이 1개(도서관 항목) 추가되어 '21년 12개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달성 정도〉

부문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분, %)	달성 정도
1. 보건의료·복지	진료	차량을 이용하여 30분~1시간 이내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다.	30분 ~1시간	22.7분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0분	14.6분
	영유아 보육·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20분	9.0분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80%	100%
2. 교육·문화	초·중등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에 도달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 수단을 제공한다.	10분	7.3분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70%	79.1%
	문화	차량을 이용하여 40분 이내에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40분	24.0분
	도서관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10분	9.9분
	체육시설	차량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0분	17.0분
3. 정주여건	주택	주민 누구나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서 거주한다.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 비율을 23% 이상으로 한다.	23%	30.7%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85%	80.6%
	하수도	군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6% 이상으로 한다.	76%	74.6%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8%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하여 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68%	69.4%
	대중교통	행정리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	100%	87.3%

II. 2021년 주요 업무 내용

부문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분, %)	달성 정도
3. 정주여건		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섬에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항된다.		
	생활폐기물	행정리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을 내 (생활/영 농100%)	(영농) 75.0% (생활) 18.8%
	방법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의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60%	71.3%
	경찰순찰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에 대하여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100%	90.8%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70%	64.9%
4. 경제활동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 지원센터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1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6% 이상으로 한다.	86%	68.8%



1.3. 농어촌 영향평가

❖ 개요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는 「농어업인 삶의 질법」(제45조)에 따라 정부 부처의 계획·정책·사업 등이 농어촌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정책조정제도이다.

-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또는 사업이 교통접근성 및 사회기반시설, 서비스 전달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시 대비 불리한 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농어촌 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6조(정책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 2항에 따라 정책등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분석·평가의 주제, 방향, 절차, 대상 정책 등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021년도 농어촌 영향평가의 대상 과제는 총 2개로서,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교육부) 및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개선’(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이 이에 해당한다.

- 이 중에서,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교육부)’ 과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도시 학생들에 비해 통학버스 의존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일부 학교는 통학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평균 통학 시간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정되었다.

-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개선’(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과제는 대중교통 기반이 열악하고 고령화 상황이 심각한 농어촌 지역의 교통 여건과 지역 간 이동성 확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하여 선정되었다.

1.3.1.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 개요

▣ 농어촌 학교의 통학 여건

- 농어촌 학교는 도시에 비해 학교 수가 부족하여 통학구 면적 및 이동시간 등 전반적 통학 여건이 불리하다.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자가차량 기준 이동시간은 평균 11.8분으로 도시 평균 4.6분에 비해 2.6배 가량 오래 걸린다.

〈지역별 이동시간 및 통학구 면적(고등학교 기준)〉

구분	도시(A)	농어촌(B)	도농간 격차(B/A)
자차 기준 평균 이동시간(분)	4.6	11.8	2.6
통학구 평균 면적(km ² /학교)	6.3	134.8	21.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교육부 내부자료(2021).

- 정부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통학에 걸리는 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교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은 2016년 3,213대에서 2020년 4,878대로 5년간 51.8% 증가하였다.
- 반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통학 수단 이용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승용차·승합차 등 자차 이용 비율(15%)도 높은 편이다.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 수단 중에서 자가차량 비중이 도시에 비해 높으며, 과거에 비해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통학차량 이용율을 높이고, 공공통학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공통학차량 및 자가차량 이용 비율에 대한 도시 및 농어촌 비교(고등학교 기준)〉

구분	도시(동부)			농어촌(읍·면부)		
	2015년	2020년	증가폭	2015년	2020년	증가폭
공공통학차량 이용 비율(%)	7.1%	11.9%	4.8%p	10.1%	19.0%	8.9%p
승용차·승합차 이용 비율(%)	5.2%	7.0%	1.8%p	12.7%	15.0%	2.3%p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2020).

□ 정책 추진 상황

- 교육부는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광역도교육청별로 통학버스, 택시 등 통학차량 운영 지원 혹은 택시 통학비 지원을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정부 통학예산 투입 상황을 비교한 결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예산 지원은 도시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광역도교육청별 학생1인당 통학 지원 예산(원)의 도·농 간 비교(2020년)〉

구분	도시	농어촌
학생 1인당 통학 예산(원)	52,937	150,573

자료: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2020), 교육부 예산집계자료(2021, 2020년 기준).

- 단, 최근 교육분권 추세가 진전됨에 따라, 지방교육청별로 재정투입 수준, 지자체와 연계 지원 유무와 더불어, 지역의 교통 여건에 따라 주요 통학 수단(택시, 버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지역별 예산 지원액은 차이가 있다.
 - * 지역별 지원액: (최대) 전라북도 59만7천 원, (최소) 제주도 3만4천 원
-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는 ‘농어촌 초·중고 통학버스 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은 목표치(50%)를 소폭 초과 달성(51.3%)하였으나, 사업 예산 투여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 * 예산액(지방비): (‘16, ’17) 174,002백만 원 → (‘19) 103,396백만 원 → (‘20) 108,696백만 원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사업’의 성과지표 및 연차별 실적 달성도〉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구분	목표					자료 수집방법 및 출처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① 농어촌 초중고 통학버스 제공 비율(%)	1 (정량)	목표	50	52	54	56	58	통학 여건 전수조사
		실적	51.3	-	-	-	-	
		달성도	102.6	-	-	-	-	
측정산식(측정방법)	농어촌 초중고 통학버스 제공 비율(%) = 통학버스 운영 농어촌 학교수/ 전체 농어촌 학교수 x 100							
목표치 산출근거	최근 2년간 농어촌 통학 여건 전수조사 결과 평균치(48%)를 감안하여 설정(50%)							

○ 학부모 및 지방교육청 실무자 면담 결과, 농어촌 지역의 협소한 도로 및 안전환경 문제를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적하였다.

- 농어촌 지역의 면담 응답자들은 지방도·마을진입로 등 전반적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교통불리지역이 많아 기상악화 시 대형버스 운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또한, 농어촌 지역의 응답자들은 통학차량 탑승 및 이동 과정의 위험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였는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통학차량 중에 일부분 유아용 카시트 등 보호장구 설치가 미흡하고, 농어촌 지역 도로 중 일부는 어린이 이동을 위한 보행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차량 중 유아용 카시트 설치비율: 42.7%



❖ 정책 개선 방안

▣ 공공통학차량 이용율 제고 및 통학수단 다양화

○ 통학 수단 확대 및 여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 현행 정책 성과지표로 설정된 '농어촌 초중고 통학버스 제공 비율'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달성'으로 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 현행 측정산식: (통학버스 운영 농어촌 학교 수) / (전체 농어촌 학교 수) × 100

- 향후, 성과지표를 농어촌 지역 학생 입장에서 정책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통학 수단 수혜 학생수 비율'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변경 측정산식: (농어촌 통학수단(버스, 택시비) 수혜 학생 수) / (농어촌 학생 수) × 100

- 향후 정책 성과지표 변경으로 통학차량 증차(예산↑), 통학수단 다양화, 노선 조정, 승하차 구역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수혜자(학생) 중심의 실질적 통학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목표치(안)〉

구분	2020년	2025년	비고
성과지표 달성율(%) [농어촌지역 통학 수단 수혜학생 수 비율(%)]	19.0%	21.0%	'15~'20년 승용차-승합차 이용 증가율(2.3%p)을 감안하여 설정

○ 학생 수요 중심 통학수단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통학수단 제공을 통한 수혜자(학생) 중심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농어촌 초중고 통학수단 제공 비율'을 신설하도록 한다.

* 측정산식: (통학 수단[버스, 택시비] 제공 농어촌학교수)/(전체 농어촌학교수)×100

▣ 농어촌 통학차량 안전도 제고

- 유·초등학생 등 교통약자가 주 정책 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호장구 설치를 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통학차량 안전 성과지표 및 연차별 달성 목표(안)〉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유아·저학년 어린이용 보호장구 설치 차량 비율(%)	42.7%*	60.0%	80.0%	100.0%

* 측정산식 : (읍·면 지역 소재 학교의 유아·저학년 어린이용 카시트 설치 통학차량 수) /
(읍·면 지역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통학차량 수) × 100

주: '21년은 읍면 소재 학교 중 보호장구 설치 차량 비율, '24년까지 보호장구 전면 설치로 적극적으로 목표치 설정

- 농어촌 통학차량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교육부)하여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자체 점검·개선체계를 구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교육청은 통학차량 운영 등 농어촌 통학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지정·확보하여 통학 여건 개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 전담인력의 역할은 지역 여건에 맞게 ① 통학차량 증가 및 노선 조정, ② 지원수단 다양화, ③ 통학로 안전확보 등 담당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 또한, 전담인력은 지역교육협의회에 참여하여 안전위해요소 관리활동 강화 등에 대한 주민 협의 및 민관협력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농어촌 지역 차원에서 학부모,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학 관련 현안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지역교육협의회 주도로 통학차량 탑승장소 안전 확보, 오작동 교통신호 개선 등 자체 안전위해요소 관리활동을 추진한다.
- * 자체 안전관리활동시 발굴한 개선사항은 교육청·지자체에서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

□ 통학차량의 효율적 운영

- 농어촌 통학차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학교간 통학 수단 공유, 타 교육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학생들이 통학에 유리한 노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향후 농어촌 지역의 통학차량은 협소한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중소형 통학 차량을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농어촌 통학차량 운영사례: 강원에듀버스〉

- 강원도 교육청의 ‘강원에듀버스’는 시·군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버스를 통합 관리
- 작은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통학, 현장체험학습 등에 공유하여 활용을 제고
- '15년 운영 시작 후 '17년 강원도 전체로 확대, 학생들은 집에서 가까운 노선 자율 선택 등교



1.3.2.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개선

❖ 개요

- (배경) 농어촌은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낮아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 제약이 있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 농어촌 지역 행정리 중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절대적으로 부족(1~3회)한 지역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 특히 군 지역은 버스정류장에서 1km이상 떨어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외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 지역에 비해 높아 대중교통 여건이 더욱 취약하다.
-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21년) 결과, 열악한 교통 여건은 농어촌 주민이 도시 이주를 희망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버스 미운행 및 1~3회 이하 운행 행정리 비율〉

구분	'15(A)	'20(B)	증감(B-A)
대중교통 미운행 행정리 비율(%)	2.4	5.9	3.5%p
버스 1~3회 운행 행정리 비율(%)	12.7	14.4	1.7%p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2020).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소외지역 내 거주 인구〉

구분	행정구역면적 (km ²)	소외지역 거주 인구수(명)	소외지역 면적 (km ²)	단위면적당 소외지역 거주민 수(명/km ²)	소외지역 면적비율(%)
시(78개소)	42,221	93,036	909	2.2	2.2
군(82개소)	54,993	132,398	1,555	2.4	2.8

주: 소외지역은 버스정류장 중심 1km(도보 15분) 벗어난 지역을 의미

자료: 국토정보플랫폼.

〈농어촌 지역 거주자 중 5년 이내 이주 희망 이유〉

구분	생활환경	직업	주택	자녀교육	가정경제	기타	합계
비율(%)	27.6	27.3	23.9	10.8	8.8	1.6	100.0

주: 생활환경: 교통, 편의시설 유무 등

자료: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보고서(2021).



- (현황) 농식품부·국토부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교통 취약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택시, 승합차, 소형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사업 운영주체(사회적조직 등) 및 운행방식 다변화, 신규 노선 및 모델 발굴 등 지속적으로 사업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21년 예산* 기준으로 농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예산은 409억 원이었으며, 국토부의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예산은 478억 원으로 총 914억 원이었다.
- * 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금액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예산(집행액 기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농촌형(백만 원)	1,726	1,796	1,688	8,046	57,488	48,928	40,952
도시형(백만 원)	-	-	-	6,407	6,060	47,026	47,797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각년도).

- (평가 결과)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사업의 경제적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중교통 소외지역은 여전히 남아 있어 사업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식품부, 국토부 모두 정책고객 대상 홍보 강화,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에 대한 고객 인지도 및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 사업 인지 비율(택시형 기준): 농촌형 53.8%, 도시형 51.8%
- * 사업 만족도(100점 만점): 농촌형 94.0점, 도시형 90.8점
- 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 여건이 불리한 군 지역의 만족도와 시간 절감 비용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영향평가 분석 대상인 충청남도의 인구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추진이 시·군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택시형) 비교〉

구 분	농촌형(A)	도시형(B)	A-B
사업 만족도(점)	94.0	90.8	3.2
연간 사업비(백만 원) (농촌형 '20년, 도시형 '19년 기준)	22,941	15,366	7,575
연간 택시 요금 감소효과(백만 원)	18,146	21,253	△3,107
연간 시간 절감비용 감소효과(백만 원)	2,426	1,787	639

주: 택시요금 감소효과 차이는 사업 도입 전 시와 군 지역 이용자의 평균 택시요금 지출 금액 차이가 주요 원인임 (시: 12,616원, 군 8,355원).

〈충청남도 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현황 및 해소율 비교〉

구분	전체 격자수 (인구 거주지역)	소외지역 격자수(A)	사업 수혜현황(B)		미해소 소외지역(A-B)	
			격자수	해소율(%)	격자수	%
농촌형(군)	13,373	1,106	375	33.9	731	66.1
도시형(시)	18,064	1,190	194	16.3	996	83.7

주: 사각지역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만 선정(거주자가 없는 격자는 소외지역에서 제외)

❖ 정책 개선 방안

- (개선 방안)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 대중교통 소외지역 거주 주민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소외지역 해소율’을 사업의 성과지표로 제안하였다.
 - * 측정산식 : (기존 소외지역 중 도시형·농촌형 사업 수혜지역) / (소외지역) × 100
 -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소외지역을 전수 조사하고, 매년 소외지역 해소율을 자체 평가하여 사업에 환류하는 방안을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통해 제안하였다.
 - 지자체가 사각지대 해소에 최적화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공간데이터베이스 및 사업관리모델 구축하여 소외지역 현황, 교통모델 투입현황 등 공간정보를 시각화하고, 시각화 정보에 근거해 사업 대상지역 조정 등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 개정 등 개선 방안의 실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1.4. 사전협의제도 도입 및 제도화 지원

❖ 개요

-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19.8월)으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지원 반영 및 필요한 제반 조치 시행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부처 간 조율을 통해 정책실행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협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제4차 기본계획’(20~'24) 수립 시, 삶의 질 대책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사전협의제도’ 도입이 결정되었다.
- * 삶의질 실무위원회(19.12.27.): 농식품부장관(위원장), 기재부, 교육부 등 21개 부처 차관 등/ 삶의질 위원회(20.2.19.):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 교육부 등 15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 2023년도부터 사전협의제도를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하여, 사전협의제도의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농어업인삶의질법의 사전협의제도 관련 조항〉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 ②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 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 주요 추진 내용

▣ 사전협의제도의 법적 근거와 정의

- 사전협의제도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 점검과 평가를 한 결과, 사전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조정, 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위원회가 이행이 부진하거나 확대가 필요한 정책·사업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삶의 질 정책의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법 제9조의2 신설, '21.11.30.)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어업인삶의질법」 제9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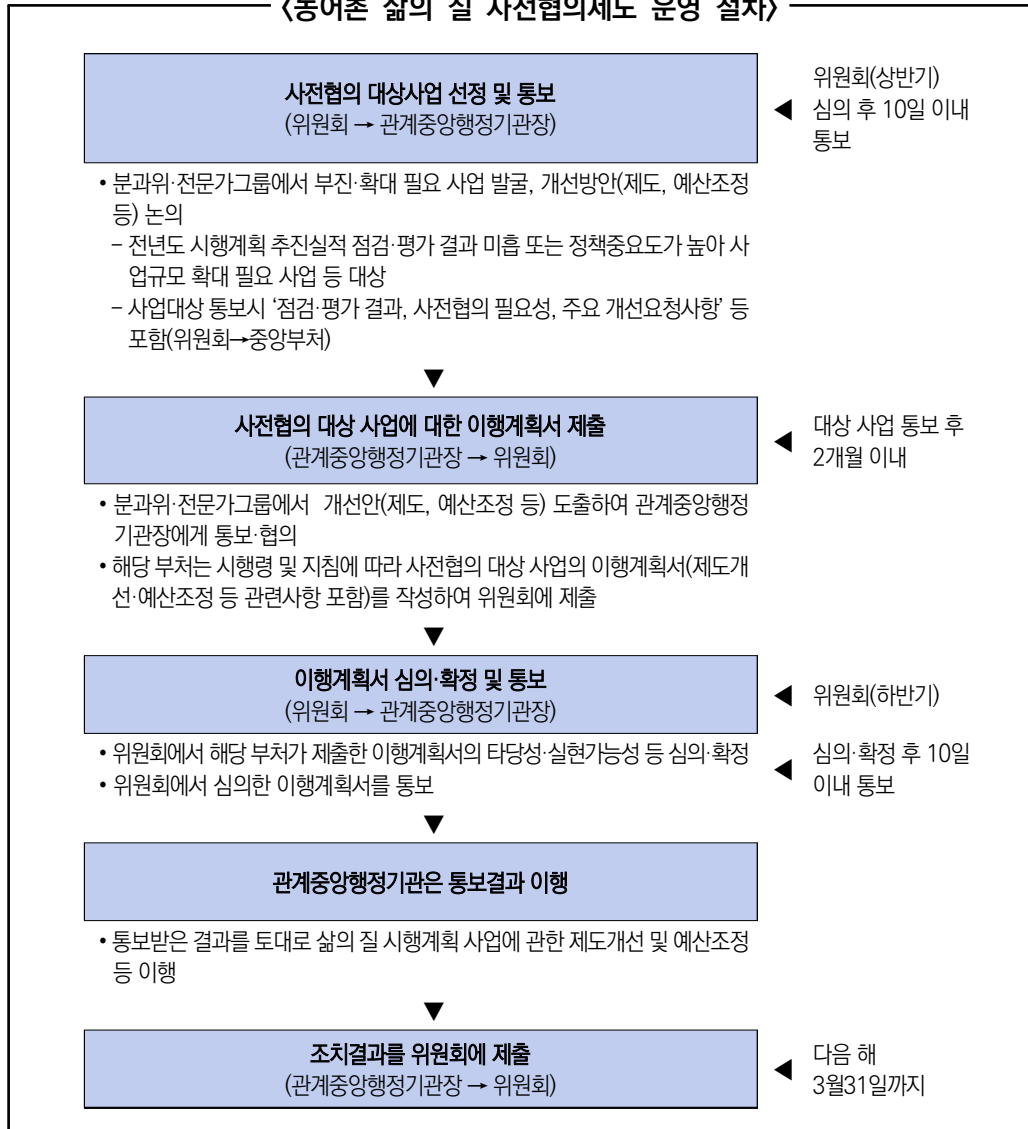
※ 제9조의2(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점검과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도 개선 및 예산 조정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전협의제도의 운영 절차(안)

- (사전협의 대상 사업 선정 및 통보) 실무위원회는 전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를 심의·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를 통해, 성과가 부진하거나 정책 중요도가 높아 사업 규모 확대가 필요한 사업 등을 사전협의 대상 과제로 선정한다.
- (이행계획서 제출) 사전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 이행계획서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며, 사업 대상, 내용, 목표, 추진방식 등이 포함된 사업 개선 사항, 예산 규모, 예산 확보 및 집행 방식 등이 포함된 예산 조정 사항, 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이행계획의 추진 일정, 그 밖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행계획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농어촌 삶의 질 사전협의제도 운영 절차〉



- (위원회의 이행계획서 심의·결정 및 통보) 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심의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지원기관 등에게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한다.

- (해당 부처의 제반 조치 이행)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 (해당 부처의 조치 상황 혹은 결과 보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상황 또는 결과에 대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한다.
 - 위원회는 이행계획서 및 위원회의 통보와 관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조치 상황 또는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전협의제도 시행령 개정안

- 사전협의제도 운영을 위해 다음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추후 보완하여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안(현 잠정안)〉

현행(구)	개 정 안(신)
〈신설〉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정사유, 개선 요청 사항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 작성방법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선사항 2. 예산 조정 사항 및 계획 3. 법령 등 제도 개선 사항 4. 추진 일정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③ 위원회는 이행계획서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에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행계획서를 심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전협의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향후 보완 요건

- 사전협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삶의 질 기본계획, 시행계획, 개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추진 일정, 시행계획 점검·평가단의 운영 절차,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 등 사전협의제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개별 정책 사업(세부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조율된 사전협의제도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 사전협의 대상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이행 실태가 저조한 세부 과제(사업)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사전협의 대상 선정을 위한 시행계획 점검·평가 지표의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양식을 마련하고, 위원회-부처 간 조정·심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실정을 고려한 대상 선정, 이행계획서 양식, 이행계획의 조정·심의·확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개별 사업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절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삶의 질 정책 사전협의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이상의 여러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하여 운영지침으로 구성하고, 사전협의제도 운영의 핵심 요소별 내용과 절차, 추진일정, 주요 참여 주체별 역할 등을 운영지침으로 마련해야 한다.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안(예시)〉

이행계획서			
사전협의 대상과제 및 담당자	과제명		
	부처명	담당자	
사업의 주요 개선 요청 사항			
이행 내용	사업 개선 사항	사업 목표	
		사업 대상	
		사업 내용	
		사업 추진방식	
	예산 조정 사항	예산 규모	
		예산 확보 및 집행 방식	
	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이행계획의 추진 일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장 귀하		



2. 조사 · 연구 업무

2.1.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2.2.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2.1.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 개요

-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는 도시와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 2021년도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시행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였다.
 - 둘째,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구 통계적 특성, 지역 유형에 따른 정책 부문별 여건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 이번 조사 항목은 2020년도부터 추진 중인 ‘제4차 기본계획’의 4대 정책 추진 전략에 따라 개편된 부문별 항목을 따랐다.
 - 또한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성을 고려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비정기 조사 부분에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 주요 추진 내용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및 방법
 - 설문조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방문 면접 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 2021년 9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6주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동 지역을 도시로,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 방법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집계된 표본 수는 3,183명이며, 그 중 도시 지역은 738명, 읍·면 지역 주민 응답자는 2,445명으로 구성되었다.



○ 조사 항목

- 조사 항목은 과년도 조사와 연속되는 일반 조사 부분과 신규로 추가한 비정기 조사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 삶의 질 정책 부문별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도까지 적용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을 반영하여 세부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 만족도를 묻는 각 항목은 11점 척도(0~10점)로 측정하여, 일부 항목에서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부문	구분	세부 항목
일반 조사 부분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	○ 행복감 ○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 ○ 거주하는 시·군 및 마을의 발전 정도 및 가능성 인식
	공동체 및 지역사회	○ 마을 및 지역(시·군 또는 읍·면) 구성원으로 소속감 ○ 이웃 주민과 원만한 관계 ○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 유무 ○ 거주 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전략 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 4대 전략별 6~11개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정주 여건 분야별 정책 중요도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개 분야 정책 중요도 11점 척도(0~10점) - 보건·의료, 경제·일자리, 주거환경, 복지, 문화·여가, 교육, 환경·경관
비정기 조사 부분	농어촌 교통정책	○ 농어촌 교통정책(택시/버스형)의 인지·경험 여부
	자녀의 통학 여건 만족도	○ 보육·교육 기관까지 통학 거리 및 시간에 대한 안전성과 만족도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 방안	○ 농어촌 초등학교 유희시설 활용 방안 및 통합학교 운영에 대한 선호도

▣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항목 중 ‘현재 행복감’과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항목은 농어촌 지역이 점수가 높지만, 거주하고 있는 ‘마을 발전 전망’과 ‘시·군 발전 전망’ 항목은 도시 지역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 점수는 상승하였지만, 도시와 농어촌 만족도 점수는 교차 되지 않았다.
- 신규 항목 ‘주관적 건강 인식 정도’, ‘주관적 삶의 질 향상 인식 정도’는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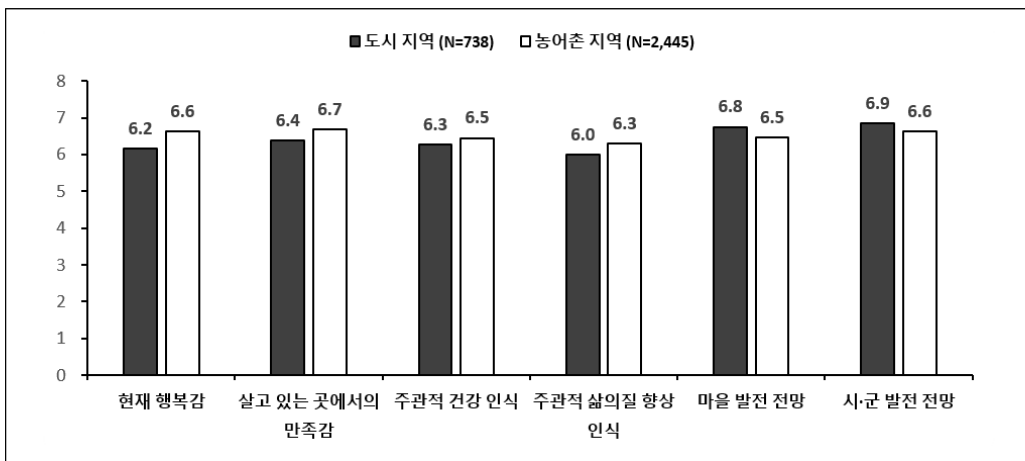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점수 비교〉

(11점 척도)

구분	현재 행복감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19	'20	'21	'19	'20	'21	'19	'20	'21	'19	'20	'21
도시지역(동)	5.7	5.5	6.2	6.0	5.8	6.4	6.2	6.2	6.8	6.3	6.3	6.9
농어촌지역(읍·면)	6.4	6.2	6.6	6.4	6.3	6.7	6.3	5.7	6.5	6.4	6.0	6.6
도·농간 차이	0.7	0.7	0.4	0.4	0.5	0.3	0.1	-0.5	-0.3	0.1	-0.3	-0.3

주: 모든 항목에서 지역별 시기별('20·'21)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p<0.01).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 공동체 및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도시 지역 대비 농어촌 지역 주민의 평가가 높았다.
- ‘마을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이웃과 관계’는 2020년 결과와 비교해 도·농 간 격차는 줄었지만, ‘거주 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 정도’의 도·농 간 격차는 늘었다.
- 이번 조사에서 추가된 항목인 ‘도움받을 수 있는 이웃 존재 여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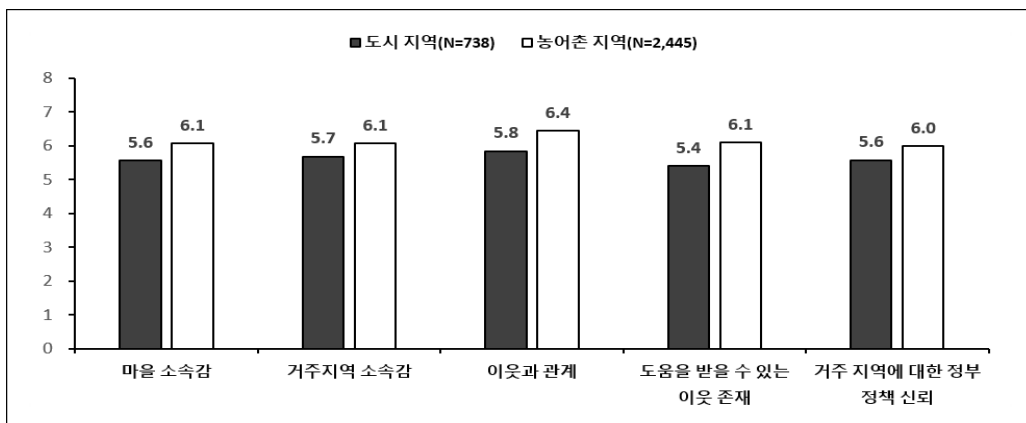
〈공동체 및 지역사회 부문 항목별 비교〉

(11점 척도)

구 분	마을 소속감		지역 소속감		이웃과 관계		도움받을 수 있는 이웃 존재 여부		거주 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	
	'20	'21	'20	'21	'20	'21	'20	'21	'20	'21
도시지역(동)	5.2	5.6	5.3	5.7	5.4	5.8	-	5.4	5.3	5.6
농어촌지역(읍·면)	5.9	6.1	5.9	6.1	6.2	6.4	-	6.1	5.4	6.0
도·농간 차이	0.7	0.5	0.6	0.4	0.8	0.6	-	0.7	0.1	0.4

주: 모든 항목에서 지역별·시기별('20·'21)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p<0.01).

〈공동체 및 지역사회 부문 항목별 비교〉



-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을 묻는 항목에서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농어촌 지역이 더 적극적인 참여 의향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활동은 도시 지역 주민이 더 적극적인 참여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참과 참여로 조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지역사회 활동 참여 정도’ 항목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참여 수준이 높게 나왔고, ‘지역의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항목은 도시 지역 주민의 참여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 농어촌 주민은 도시 주민보다 생업과 생활에 관련된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적극적이지만, 지역의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활동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활동 정도와 활동 참여 의향〉

단위: %

구 분	지역사회 활동 참여 정도				지역의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활동 참여 의향				
	불참		참여		불참	생각해본 적 없음	참여		
	전혀 불참	소극적 참여	비교적 참여	적극 참여			권유시 참여	가능한 참여	적극 참여
도시지역(동)	35.2	41.3	20.5	3.0	12.1	24.7	33.3	24.7	5.3
농어촌지역(읍·면)	28.0	41.1	25.0	5.9	13.3	31.5	27.9	22.5	4.9
도·농간 차이	-7.2	-0.2	4.5	2.9	1.2	6.8	-5.4	-2.2	-0.4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4대 추진 전략별 만족도 조사 결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4대 전략별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농어촌 주민은 도시 주민 보다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고 평가하였다.
 -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모든 부문의 만족도 점수가 도시 지역보다 낮았으며, 전체적으로 평균 0.8점 차이가 났다.
 -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만족도 격차는 1.2점으로 도·농 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전략 부문은 정주기반(6.4)이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전략 부문은 경제·일자리(5.3)이지만 도·농 격차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문화와 경제·일자리 부문의 만족도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 작년과 비교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일자리 부문의 만족도 점수는 크게 올랐다.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별 만족도 평균점수〉

(11점 척도)

부문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20	'21	'20	'21	'20	'21
보건·복지	6.8	7.0	5.2	5.8	-1.6	-1.2
교육·문화	6.1	6.4	4.8	5.4	-1.3	-1.0
정주기반	6.9	7.1	5.9	6.4	-1.0	-0.7
경제·일자리	5.5	5.6	4.6	5.3	-0.9	-0.3
전체 평균	6.3	6.5	5.1	5.7	-1.2	-0.8

주: 각 부문의 평균 점수와 세부항목의 도·농간 차이는 도시·농어촌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한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된 결과임.

- 농어촌을 대상으로 조사한 4대 전략 부문 34개 세부 항목 중 작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32개 항목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증가하였고, 도·농 비교가 가능한 29개 항목 또한 도·농 간 만족도 격차가 감소하였다.
 - 전체 세부 항목 중 분만의료 서비스(5.9점), 문화·여가 서비스(5.4점), 대중교통(5.7점), 소득 기회(5.2점) 등 각 전략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도시 지역과의 격차도 높게 나타났다.
 -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차이가 가장 큰 부문은 보건·복지 부문이며, 세부적 항목으로 '분만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 범위' 항목이 도·농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 올해 조사부터 추가된 '여성 및 다문화 주민 복지지원' 항목과 '취약계층 복지지원' 항목은 농어촌 지역의 만족도가 조금 더 낮게 나타났다.

▣ 지역 및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정책 부문별 중요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전략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7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지역과 연령에 따른 부문별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 지역별·정책 부문별 중요도를 살펴보았을 때, 농어촌 지역은 '주거환경'과 '환경·경관', 도시 지역은 '보건의료' 부문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2021년 주요 업무 내용

- 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정책 부문은 '환경·경관'(7.4)과 '주거환경'(7.3), 읍 지역은 '주거환경'(6.6)과 '환경·경관'(6.6), 동 지역은 '보건의료'(7.1)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은 공통적으로 '환경·경관'과 '주거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면 지역에서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정책 부문은 '교육'과 '문화·여가', 읍 지역은 '문화·여가'와 '경제·일자리', 동 지역은 '경제·일자리'로 나타났다.

〈부문별 정책 중요도 항목의 지역 유형별 비교〉

(11점 척도)

지역 구분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	주거환경	환경·경관	경제·일자리
전국		6.9	6.7	6.5	6.5	7.0	7.0	6.5
도농	도시 지역	7.1	6.8	6.7	6.8	7.0	6.9	6.4
	농어촌 지역	6.8	6.6	6.5	6.4	7.0	7.0	6.6
읍면	읍 지역	6.5	6.3	6.2	6.1	6.6	6.6	6.1
	면 지역	7.1	7.0	6.8	6.8	7.3	7.4	7.0

- 연령별·정책 부문별 중요도를 살펴보았을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문별 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 연령별로 가장 평가 차이가 컸던 부문은 '경제·일자리'로 60대 이상과 40대 평가 차이는 1.6점으로 나타났다.
-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40대의 '경제·일자리'(5.9점)로 나타났다.

〈부문별 정책 중요도 항목의 연령별 비교〉

(11점 척도)

연령 구분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	주거환경	환경·경관	경제·일자리	평균
연령	19~29세	6.4	6.0	6.1	6.0	6.5	6.3	6.0	6.2
	30대	6.3	6.1	6.1	6.1	6.4	6.3	6.1	6.2
	40대	6.3	6.1	6.0	6.0	6.6	6.5	5.9	6.2
	50대	6.9	6.7	6.6	6.5	7.0	7.0	6.4	6.7
	60대 이상	7.7	7.5	7.3	7.3	7.8	7.8	7.5	7.5



▣ 소결 및 시사점

- 2021년도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행복감과 거주지에서의 만족감은 농어촌 지역이 높게 나타났지만, 거주하고 있는 마을과 시·군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신규로 추가된 ‘주관적 건강 인식 정도’와 ‘주관적 삶의 질 향상 인식 정도’는 농어촌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정책 분야 중 보건·복지, 교육·문화 분야는 실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4대 추진 전략별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부문에 대해 농어촌 주민은 도시 주민보다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주민의 연령대, 농어업 종사 여부 등 응답자 특성에 따라 각 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수요가 상이하다.
 -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읍 지역 주민이 면 지역 주민보다 각 여건 별 만족도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와 농어촌의 정주 여건의 만족도 격차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격차가 심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근본적인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2.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 개요

-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는 국책 연구원 및 시·도 연구원으로 구성된 삶의 질 향상 정책 지원 네트워크에 참여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각 기관별 전문 분야에 대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검토, 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추진 전략 ① 보건·복지, ② 교육·문화, ③ 정주생활 기반, ④ 경제·일자리에 대하여 정부 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
-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과제별 이슈에 대하여 통계 및 현장 자료를 활용해 농어촌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성과 및 파급효과를 실증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2021년 심층연구는 제4차 기본계획에 설정된 방향에 따라 핵심 과제들을 발굴, 이를 농어촌 지역에 적용하거나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1년 심층연구 추진내역〉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 주제
한국교원대학교	이재림	농촌 지역 학교시설 복합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도농 상생을 위한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인구감소 시대,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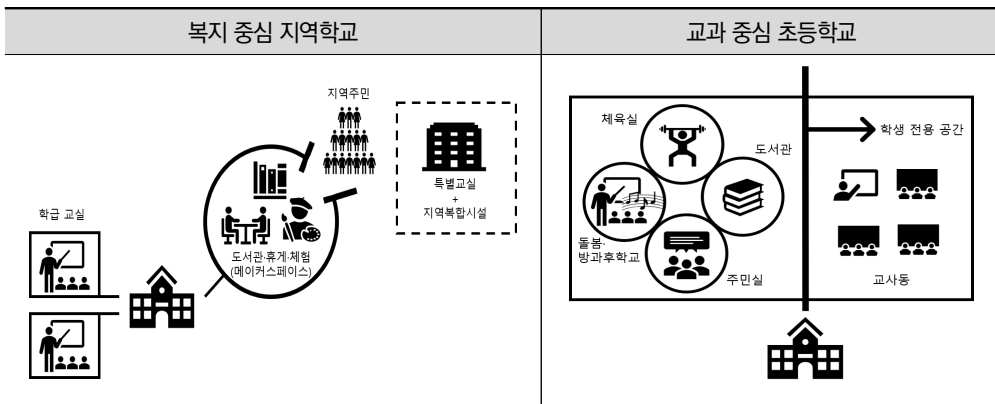
2.2.1. 농촌 지역 학교시설 복합화와 정책과제

- (배경) 농촌은 저출산·고령화 및 도시 이주로 인한 인구 유출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 정주 여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농촌 지역 학교는 학생 수 감소 추세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며, 고학년 학생의 경우 교우관계를 포함하여 사회성 결여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 이에 따라 학령아동이 있는 세대의 도시 이주로 인한 지역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농촌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작은학교 재배치 등의 미래학교 개념의 재구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
 - 따라서 농촌 지역의 교육력 확보 및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지역 도서관 및 아동돌봄시설, 주민 생활편의시설 등을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에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주요 내용) 본 연구는 농촌 지역 정주여건에 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교시설 복합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학교시설 복합화 개념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관련 법령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농촌 지역 작은학교의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정규모 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 미래 지속가능한 학교의 재배치 방향을 제시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조사를 통해 농촌 지역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 방향을 기술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조사와 국내 및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복합화 유형을 구분하고, 농촌 지역 작은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과 운영 및 제도를 제안하였다.
 - 첫째, 1교 3-4캠퍼스 학교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농촌 지역 읍·면에 위치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지역학교와 연계되는 캠퍼스형 학교를 제안하고, 농촌 면 지역 작은학교에 대한 적정규모를 제시한다.
 - 거점학교는 인근 작은학교의 초등 5~6학년에 대해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작은학교는 1~4학년 저학년을 중심으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체제

를 도입한다.

- 둘째, 지역 및 학교급 특성별 기존 학교 복지 확대 방안으로서 ‘복지 중심 지역 학교(저학년 중심 운영 학교)’와 ‘교과 중심 초등학교(고학년 중심 운영 학교)’로 개념을 구분하고, 각각의 교육과정 특성을 제시하였다.

〈기존 학교 복지 확대 방안 개념도〉



○ (정책 제안) 농촌 지역사회 정주 여건과 주민 편의를 위한 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방안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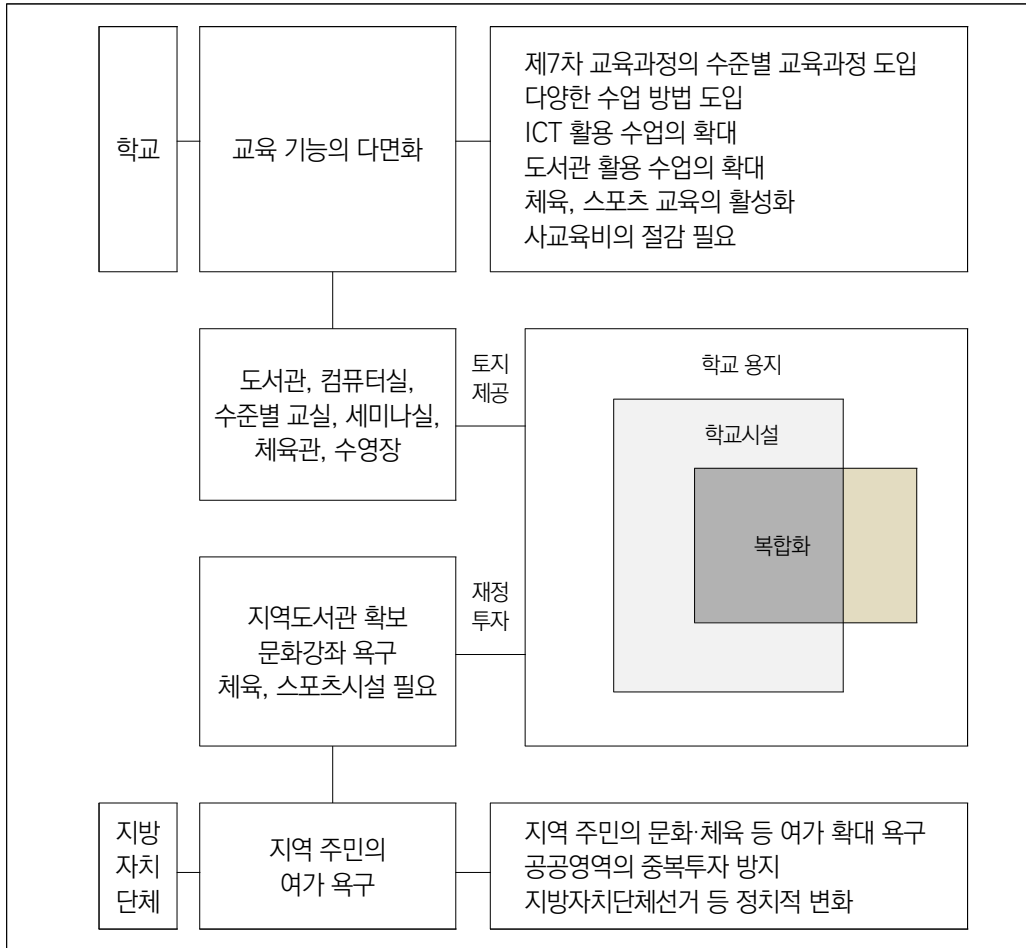
- 면 지역 지역학교(1~4학년 중심)에 대해서는 아동 감성 중심학교 숲 조성 및 방과 후 주민에 개방, 기존 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공간, 아동 돌봄 기능 및 방과 후 학교, 학교 도서관과의 통합 복지 기능,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중심 영역 조성(지자체 운영 지역체계구축), 메이커스페이스 등의 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거점 초등학교(1~6학년 유지 거점지역) 복합시설 방향은 고학년 중심 교과교육 환경 확대, AI 활용 분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지역 청소년 중심 활동 공간, 학교 도서관과의 통합 복지 기능, 각 시설 운영에 마을교육협력체와 같은 주민 참여 촉진, 카페, 한글학교, 영농교육, 음악 활동 등의 기존 시설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중심 공간의 조성 등이다.
- 읍 지역 지역학교(1~4년 유지 지역학교) 복합시설 방향에 대해서는 아동 감성 중심학교 숲 등 지역 공원화 시설을 마련하고, 교통 여건에 따라 주차장, 공원, 평생교육 등 지역 공공시설 조성 및 읍 지역 랜드마크형 아동 전문 도서관을 제



시하였고, 지역사회 복합시설로서 아동 돌봄 기능 및 학교도서관의 통합 복지 기능을 강화해 돌봄센터와 아동 전문 도서관, 실내 상상 놀이터, 실외 아동 전용 놀이터 등 아동 중심의 감성 놀이 환경 조성, 카페 및 음악 활동이 가능한 기존 시설 활용 지역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자체 운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각 시설 운영에 지역 주민 참여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읍 지역 거점학교(1~6년 유지 거점지역) 복합시설 방향은 고학년 중심 교과교육 환경을 확대하고 방과 후 교육활동을 위한 경험 중심 교과 인프라 구축, 청소년 교류 및 여가 공간이나 수영장·오케스트라·소극장 등 지자체와의 복합화 추진, 아동 돌봄센터나 음악 카페 등의 지역아동 및 청소년 중심 활동 공간, 학교도서관의 통합 복지기능(청소년도서관, 놀이공간), 카페, 한글학교, 영농교육, 음악활동 등의 지역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제안하고, 지자체 운영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학교는 도서관, 회의실, 시청각실, 다목적활동실 등 개방 구역을 배치해 방과 후 자유로이 학생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 구조 개선을 제안하였다.
- 농촌 지역 폐교된 마을 외곽의 중학교는 체험 교육시설을 조성해 도시 지역 학교 온라인 수업과 체험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오전 교과수업 및 오후 현장 체험활동이 가능한 기숙형 체험학교 등을 만들어 환경·안전·공예·문화·시·문학·예술·악기·4차산업 등에 관한 교육 진행, 지역 복합시설로서 지역 및 도시 청소년들의 개별 체험활동 공간 조성, 게스트하우스 운영 및 주변 관광지 연계, 구도심 학교 도서관과의 통합 복지 기능 강화, 농촌 지역 농산물 연계 가공·판매 및 여가 활동 공간 확보 등을 활용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학교시설 복합화 개념도〉





2.2.2. 도농 상생을 위한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방안 연구

- (배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유행이 길어지면서 도시에 비해 감염 위험이 낮으며, “코로나 블루”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농촌이 주목받고 있다.
 - 재택근무, 화상 회의 등 비대면 근무가 확산되면서 사람들 사이의 대면 접촉과 사회관계가 줄어들어 우울감이 커지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아 감염 위험이 낮으며, 우수한 경관·자연 자원을 보유하여 “코로나 블루”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증가한 비대면 업무 및 여가 수요를 흡수하여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개념과 조성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주요 내용) 연구는 사회 여건의 변화와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필요성, 잠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격근무·위케이션 관련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은 일과 주거의 결합, 주거와 공동체의 결합, 일과 공동체의 결합을 넘어서는, 주거·일·공동체와 여가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으로서 지역 혁신을 창출하는 제4의 융합 공간으로 개념화하였다.
 -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을 성공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선호와 수요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 또한 지역의 유·무형 자산 및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5G 통신망 등 디지털 업무 기반과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을 충실히 갖추어야 했다.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 잠재 수요자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 쾌적한 자연 환경·경관을 보유한 한적한 장소에 입지한 새로운 스마트워크 유형을 원하고 있었다.

II. 2021년 주요 업무 내용

-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을 위케이션형과 원격근무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에 적합한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화를 위한 추진 체계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책 제언)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이 조성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이 위성사무소, 지사 등을 농촌에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촌 스마트워크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5G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 ‘농식품부-지자체-기업-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 이용자 확보 및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이용료 분담 등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조직을 참여시켜 사업 추진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의 시설 유형 및 주요 기능〉

구분	시설 유형	주요 기능
원격근무형	업무시설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쾌적함이 결합된 업무공간 초고속 인터넷 환경, 공유 오피스, 메이커 스페이스 등
	주거시설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원 속 주거시설 주거시설(개인형/가족형), 포켓가든(개인용 텃밭) 등
	교육·문화시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 작은 영화방, 작은 도서관, 생태놀이터, 커뮤니티 가든 등
	교류·지원시설	도시와 농촌 간 교류·정보제공 및 새로운 문화 창조 시설물 임대·유지 및 고객관리 등을 위한 사무공간
위케이션형	위케이션 하우스	일과 휴식의 병행을 고려한 중·단기 체류형 숙박시설 편리한 스마트 워크(일) + 쾌적한 중·단기 숙박(휴식)
	치유·휴양시설	도시에서 지친 몸과 마을 치유할 수 있는 휴양시설 치유농원, 휴양림, 헬스케어, 산림치유, 농촌체험 등
	교류·지원시설	도시와 농촌 간 교류·정보 제공 및 새로운 문화 창조 시설물 임대·유지 및 고객 관리 등을 위한 사무 공간

2.2.3. 인구감소 시대,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방안 연구

- (배경)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도 사회·경제·공간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농촌 주민 삶의 질 변화를 섬세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거시적인 국토 공간 변화와 농촌 생활권 고유의 특성 모두를 함께 고려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삶과 일과 쉼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과 차별화된 농촌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 이 연구의 목적은 인구감소에 따른 국가적 사회변동과 다양한 농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농촌정책의 새로운 추진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 국가적 차원과 농촌지역 차원의 여건 변화 상황과 농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여, 시대적 여건에 부응하는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대응 과제를 모색한다.
- (주요 내용) 농촌의 현황 및 여건 진단, 국내외 농촌정책 동향 및 사례 조사, 농촌 정책 및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 분석 등을 바탕으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농촌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 (정책 제안)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농촌정책은 국민 모두를 위한 농촌을 지향해야 하며, 국민 모두에게 삶과 일과 쉼이 있는 융합의 공간으로서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1 실행 전략을 제안하였다.
 - 첫째, 미래를 준비하는 인적 자원 육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혜 계층은 제한적이므로 청년 유입 및 활동 지원, 관계인구 저변 확대, 새로운 농촌 공동체 육성 등에 주목하여야 한다.
 - 둘째, 지구적 차원의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가 농촌지역의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바, 농촌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농촌형 저탄소·생태 시스템 구축, 농촌다움 복원 활동 확산, 산림뉴딜 30·30 등을 추진해야 한다.

- 셋째, 농촌 공간의 난개발과 저개발 문제를 완화하고 농촌다움을 복원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농촌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여 농촌 마을의 시설과 인프라를 정비하고 깨끗하고 활기찬 농촌 마을 재생을 추진해야 한다.
- 넷째, 농촌 주민들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편리한 스마트농촌을 구현해야 한다. 디지털 농촌 혁신으로 스마트 365생활권을 고도화하고, 농촌형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
- 다섯째, 농촌의 핵심 산업인 농업 환경을 지속가능하고 일하기 좋은 여건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친환경농업 강화,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 공익형 직불제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
- 여섯째, 농촌은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 활동이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농촌 기회특구 조성 등을 포함하는 농촌혁신클러스터 조성, 저밀도경제 기반 구축, 지역사회 기반 일자리 창출, 선도 농촌지역의 스마트 전문화 등을 제안한다.
- 끝으로, 이러한 제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재정적 지원이 동반되며, 중앙·지방의 추진체계가 견고해져야 한다. 현행 예산 구조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사각지대와 중복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전 국민에게 열린 농촌의 공간적 재구조화와 기능 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사업의 재편과 확충이 필요하다.

〈삶의 질 향상 정책 6+1개선 방안〉

비전	국민 모두를 위한 농업·농촌 삶과 일과 재미 있는 융합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대 전환
목표	[삶터] 어디에 살든지 생활여건이 구비된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 재생 [일터] 농업의 스마트화, 농촌형 경제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증가 [집터] 탄소중립과 생태적 전환을 선도하는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6+1 실행전략

전략	핵심 과제
미래를 준비하는 인적 자원 육성	① 청년 유입 및 활동 지원 ② 관계인구 저변 확대 ③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촌 공동체 육성
기후위기 대응과 농촌다움 복원	① 농촌형 저탄소·생태 시스템 구축 ② 농촌다움 복원 활동 확산 ③ 산림뉴딜 30-30
계획적 정비를 통한 농촌 공간 조성	① 농촌 마을 시설·인프라 정비·혁신 ② 농촌 마을 재생 ③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삶이 품격있고 편리한 스마트농촌 구현	① 스마트 365 생활권 고도화 ②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③ 제도 및 예산 기반 마련
지속가능하고 일하기 좋은 농업 환경 조성	① 친환경 농업 ② 스마트 농업 ③ 공익형 직불
신산업 공간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① 농촌혁신클러스터 조성 ② 저밀도경제 기반 구축 ③ 지역사회 기반 일자리 창출 ④ 선도 농촌지역의 스마트 전문화



추진기반 정비	■ 관련 법·제도 개선 ■ 재정과 예산 투입 ■ 지역 주도 통합 추진체계 구축
--------------------	---

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 개요

- (배경) 2015년부터 발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은 범부처 차원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하고, 농어촌 주민·국민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유도하고자 한다.
 - 2021년 ‘농촌, 희망의 길을 걷어간다’ 우수사례집에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 및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노력을 발굴·조사하였다.
- (대상 사례) 보건·복지, 경제활동, 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환경 등의 분야에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17개 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 (홍보 방안) 사례집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포스터(농촌 삶의 질 이야기)를 통해 각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 주요 내용

▣ [보건·복지]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

- 장애 학생들을 끌어안기 위한 농촌 지역사회의 노력, ‘이랑협동조합’
 - (소재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 (주요내용) 특수교육을 전공한 청년 3명이 모여, 장애 재활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랑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키워드) 장애특화 재활사업, 장애인식 개선사업, 사회적기업, 청년창업
- 지역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노인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 (주요 내용) 세대 간 소통을 통한 어르신 돌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등을 마을 공동체가 직접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를 실천하고 있다.
 - (키워드) 노인돌봄, 주거복지, 지역사회통합돌봄
- 소규모 농가가 생산하는 로컬푸드를 초등 돌봄 도시락으로, ‘~~함~~함께하는다이웃’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 (주요 내용) 소규모 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해 건강한 도시락을 만들어 초등 돌봄교실 아동과 지역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있다.
 - (키워드) 로컬푸드 도시락 사업, 초등 돌봄교실 도시락 공급, 사회적 기업
- 폐광촌 노인들의 더불어 살기, ‘떡방마을 공동생활홈’
 -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 (주요 내용) 폐광촌 주민들이 마을 독거노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생활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키워드) 노인 주거복지, 마을만들기, 공동생활홈, 지역사회돌봄

▣ [경제활동] 사람들이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

- 문화콘텐츠로 마을과의 상생을 꿈꾸는 청년들의 이야기, ‘**리플레이스**’
 -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 (주요 내용) 도시 청년이 농촌 마을에 들어와 지역의 문화 자원을 발굴하거나 지역의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이나 명소로 재탄생시켰다.
 - (키워드) 청년 귀촌,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문화 자원, 유희공간, 지역문화 콘텐츠
- 지역 명소이자 공동체의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 폐역사(驛舍), ‘**나전카니발농업회사법인**’
 - (소재지)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 (주요 내용) 폐광 지역의 유희공간인 나전역사(驛舍)를 관광두레와 지자체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카페로 리모델링하고 지역의 명소로 조성하였다.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일자리 제공하고 있다.
 - (키워드) 폐광, 철도, 유희공간 활용, 관광두레
- 도시 근교 농촌 마을에서 농촌관광으로 소득을 창출하다, ‘**질을고래실마을**’
 -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 (주요 내용) 도시에 가깝다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고, 농촌만이 가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산업을 육성하였다.
 - (키워드) 농촌관광, 농외소득, 농촌자원, 자연경관

▣ [일자리] 일자리가 있는 농촌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

-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도시 청년들의 시골 정착기, ‘**자이언트 삶기술학교**’
 - (소재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 (주요 내용) 도시 청년들이 농촌 마을에서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공동체이다. 도시 청년 63명이 마을에 들어와 유희공간 재생, 일자리 창출, 문화콘텐츠 개발 등의 일을 하고 있다.



- (키워드) 청년 귀촌, 도농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 문화콘텐츠, 지역문화자원
- 꽃으로 소통하는 사회적기업, ‘화이통협동조합’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북면
 - (주요 내용) 2016년부터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꽃차를 테마로 한 가공 및 판매,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어르신 꽃재배,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2019년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 (키워드) 꽃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6차산업, 노인 일자리
- 빌레나무를 이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 ‘느영나영복지공동체’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 (주요 내용) 제주도 자생식물인 빌레나무를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 (키워드) 노인복지, 노인 일자리, 빌레나무

▣ [교육]마을과 학교가 한마음인 농촌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

- Win-Win Village & School, ‘안내초등학교’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 (주요 내용) 전교생 30명의 농촌 소규모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Win-Win Village & School’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지원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방과 후 마을돌봄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통해 교육의 4주체 ‘학생, 교사, 학부모, 마을 주민’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 (키워드) 작은학교, 마을학교, 마을연계교육, 지역교육, 마을돌봄
- 학교와 마을을 잇다, ‘남해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
 -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 (주요 내용) 남해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농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였다. 지역에 아동돌봄 및 교육 공간을 마련해 제공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등 상주면의 교육 환경 발전을 도모해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지역 활성화

에 기여하였다.

- (키워드) 돌봄, 보육, 교육, 마을공동체, 작은 학교

○ 예술을 매개로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플랫폼, ‘남해초등학교’

-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 (주요 내용) 교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연극·뮤지컬 등의 특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극장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문화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하였다.
- (키워드) 초등학교, 유휴공간, 연극·뮤지컬, 소극장

■ [문화·여가]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가는 사례

○ 폐교를 활용한 지역 문화 재생 공간, ‘웃다리 문화촌’

-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 (주요 내용) 폐교를 지역 문화 재생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문화 활동 지원 하고 있다.
- (키워드) 폐교, 유휴공간활용, 문화예술공간

○ 주민들의 일상이 된 문화예술 ‘사라실 예술촌’

- (소재지) 전남 광양시 광양읍
- (주요 내용) 폐교를 예술촌으로 탈바꿈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키워드) 폐교,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공간

○ 청년 공예인들의 손길로 조용한 농촌 마을을 문화와 생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다, ‘사비 공예문화산업지원센터’

-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 (주요 내용) 충청남도와 부여군이 수행한 123사비 청년 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부여군 규암마을에 14개 공방을 입주시켰다. 공방을 운영하는 청년 공예인의 활동과 역사를 담은 공방을 보러 마을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 (키워드) 123사비 청년 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사비 공예문화산업 지원센터, 규암마을

▣ 행정 우수사례 인터뷰

- ‘내륙 수산도시’ 향한 화순군의 기발한 실험, ‘능주종방단지 이전’
 - (소재지) 전라남도 화순군
 - (주요 내용) 화순군 행정이 주도하여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양돈 단지인 능주종방단지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수산업클러스터 조성함.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 (키워드) 내륙 수산도시, 능주종방단지 이전, 수산업클러스터, 악취 해결



3.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지원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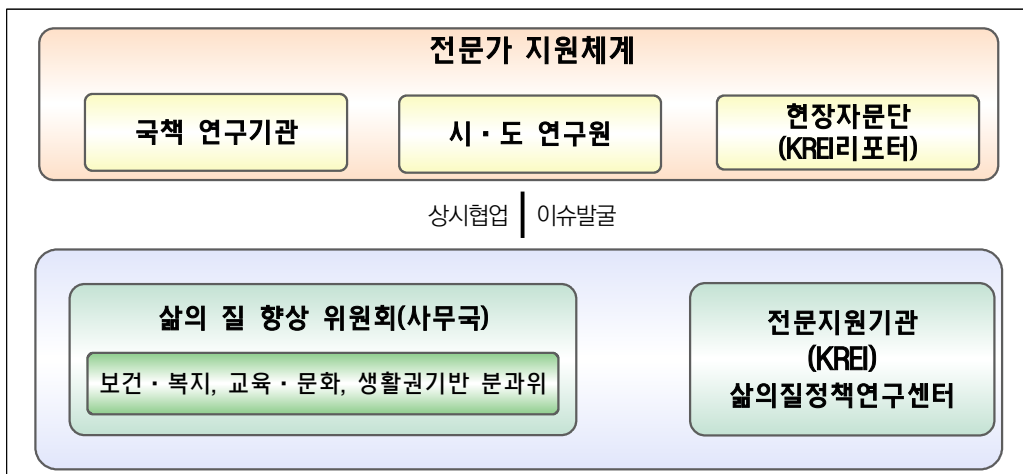
- 3.1.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성·운영
- 3.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지원
- 3.3. 농촌 삶의 질 이야기 발간
- 3.4. 농촌 삶의 질 카드뉴스 제작

3.1.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성 · 운영

❖ 개요

- 분야별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 활동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2015년도에 협약을 맺고 정책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 분야별 서비스 전달자와 지역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농촌 현장의 여론, 정책 수요, 연구 수요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 정책지원 네트워크는 크게 전문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농어촌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의 각 일원이 협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농촌의 이슈를 발굴하였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 및 연구 성과를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 7개의 국책 연구원, 9개의 시·도 연구원, KRE리포터로 이루어진 현장자문단 등이 활동하고 있다.

〈정책지원 네트워크 체계〉





❖ 주요 추진 내용

▣ 제27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 개요

- 일시: 2021년 10월 26일 (화) 15:00~17:30
- 장소: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 대강당
- 주최 및 주관: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제: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활용 방안

〈주요 내용〉

- 이번 포럼은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촌공간 계획 도입 구상안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일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이다.
- 1부에서는 주제발표와 사례발표가 있었다. 특히 최우성 괴산군 농촌개발팀 주무관은 괴산군 연풍면 신평마을 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 현황과 ‘농촌재생뉴딜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 이어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활용’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농촌공간계획 담당자, 현장 활동가, 학계 및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정부의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을 했다.

〈주요 토론 내용〉

- 전인철 지역플러스 소장은 농촌공간계획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히 시간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농촌공간계획이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인구문제, 4차 산업혁명의 침투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II. 2021년 주요 업무 내용

-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농촌공간계획을 하면서 축사, 태양광, 공장 등의 시설을 이전시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시설들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 무엇보다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지역 주민들이 지금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침으로써 농촌 지역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용 가치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용하지 않을 때의 가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농촌의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본래 가지고 있던 가치가 훼손되며, 이에 따른 비용도 함께 고려하여 토지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농촌지역의 난개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이상문 협성대학교 교수는 농촌공간계획이 농촌다움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으면서 농촌공간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 농촌형 용도지구 지정에 대한 논의에서도, 지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농촌다움까지 보존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농촌공간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앙부처 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앞으로 농촌공간계획을 현실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202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 개요

- 일시: 2021년 12월 16일 (목) 14:00~17:30
- 장소: 서울 LW컨벤션 그랜드볼룸
- 주최 및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의 길, 학교에서 찾다

〈주요 내용〉

-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의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로, 교육 분야에 대한 2건의 주제발표와 2건의 현장 우수사례 발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 1부에서는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 2부에서는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심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202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 진행된 업무 성과를 소개했다.
- 이어 이재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농어촌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방향: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농촌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농촌 지역의 학교 시설을 복합화함으로써 농촌의 학교 여건과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 이종수 남해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 이사장은 '농촌학교의 변화, 새로운 마을생태계 조성으로 나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남해군 상주면의 주민과 학교가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농촌의 교육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소개했다.
- 마지막으로 이요셉 옥천 안내초등학교 학부모연합회 회장은 '마을과 학교를 잇다'라는 제목으로, 폐교 위기에 놓여있던 소규모 농촌 학교 안내초등학교를 마을 주민, 학부모, 학교, 학생이 똬똬 뭉쳐 우수학교로 변모시킨 사례를 소개했다.

〈주요 토론 내용〉

○ 3부에서는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의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 서광주 보령먹방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농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학교 교사와 마을운동가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을의 평생교육과 학생교육을 다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농촌학교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농촌학교 활성화를 위해 교원과 마을주민의 역량, 행정, 프로그램 등의 요소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이재덕 경향신문 기자는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아이들을 위한 돌봄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남해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과 안내초등학교의 사례가 가진 시사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농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농촌의 과소화, 고령화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육 여건의 개선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며, 농식품부에서도 교육 활동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며 학교 시설 복합화 등과 같은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3.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 전문지원기관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 2021년에는 본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보건·복지, 교육·문화)가 각각 1회씩 개최되었다.
- 2021년 5월에는 정기 심의·보고 사항 관련 안건을 실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 안건은 2020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및 2021년 시행계획,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결과, 농어촌 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시행계획, 2020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였다.
- 2021년 6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본 위원회를 서면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 안건은 실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020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및 2021년 시행계획,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결과, 농어촌 영향평가 과제 선정 및 시행계획, 2020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였다.
 - 2020년 삶의 질 시행계획 세부과제 178개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2021년 삶의 질 시행계획 173개에 대한 부문별 시행계획 주요 내용과 투융자 계획 등을 검토·확정하였다.
 - 또한 2021년 농어촌 영향평가 과제로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교육부)’,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개선(농식품부, 국토부)’을 선정하고, 과제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
- 2021년 11월에는 보건·복지 분과위원회와 교육·문화 분과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되었다.
 - 보건·복지 분과위원회의 안건은 ‘농촌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로, 낮은 인구밀도와 고령화에 따라 적정 수입을 얻기 힘든 농촌지역에 요양기관 진출 촉진을 위해 경제적 유인이 제공되어야 함을 안건으로 제시하였다.

II. 2021년 주요 업무 내용

- 주요 검토 의견으로는 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급여 인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공립 장기요양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안건은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안'으로 농어촌 통학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문제점을 도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 주요 의견으로 지역단위 T/F팀을 구성하여 학생 중심 노선 개발이 필요하며 대형 및 소형 차량을 활용한 투트랙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통학 여건 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 및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3.3. 농촌 삶의 질 이야기 발간

❖ 개요

- 2018년부터 다양한 주제로 농촌의 현실을 파악하고 농촌에 관한 관심을 환기 시키려는 목적으로 ‘농촌 삶의 질 이야기’라는 이름의 포스터를 자체적으로 기획·발간하였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지자체 우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한다.
 -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 축적된 조사연구 내용,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 발간된 포스터는 각 시·군 삶의 질 정책 담당 부서, 공무원, 삶의 질 정책지원 연구네트워크(국책연구기관 및 시도연구원), 현장자문단, 농촌 주민으로 구성된 KREI 통신원과 리포터 등에게 배포한다.
- 2021년에는 총 2개(13호, 14호)의 삶의 질 이야기가 발간되었다.
 - 1호: 농촌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 (2018.7.)
 - 2호: 청년, 농촌에서 즐거운 삶을 꿈꾸다. (2018.8.)
 - 3호: 없어서는 안될 농어촌 학교 (2018.10.)
 - 4호: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서 시작한다. (2018.12.)
 - 5호: 주민들은 농어촌에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2019.1.)
 - 6호: 농촌 주민의 삶 터(據), 현재 주거 여건은 어떠한가? (2019.3.)
 - 7호: 농어촌 공공서비스, 어떻게 제공되고 있을까? (2019.6.)
 - 8호: 최근 농업분야에 나타난 고용 증가 추세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2020.2.)
 - 9호: 사람을 보듬은 농촌, 사회적 농업 (2020.3.)
 - 10호: 농촌의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주민들이 만든다 (2020.4.)
 - 11호: 미래 지속가능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영·유아 보육에서 시작한다 (2020.6.)
 - 12호: 농작업안전재해, ‘사전예방’과 ‘사후보상’의 연계가 중요하다 (2020.11.)
 - 13호: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 (2021.2.)
 - 14호: 농촌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진료시설 접근성으로 살펴본다 (2021.11.)

❖ 주요 추진 내용

▣ 농촌 삶의 질 이야기 13호

- (제목)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
- (구성)
 - 노인 돌봄 잠재 수요자가 많은 농촌
 - 농촌의 열악한 돌봄 제공 체계
 - 농촌 노인이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일은 '건강',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려울 때 생활하고 싶은 곳은 '현 거주 주택'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농촌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주민이 참여하는 돌봄 조직이 서비스 주체가 되는 것
 - 사례로 본 지역사회 통합 돌봄
 - * '거점 경로당'으로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진천군 지역사회 통합 돌봄>
 - * 마을이 제공하는 주간보호서비스 <영광군 비영리 민간조직 '여민동락'>
 - 면 단위 농촌지역에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을 확산하려면
- (내용) 최근 지역사회 구성원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역량을 갖추고 농촌 지역 돌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이 성공하려면 지역사회 구성원이 직접 돌봄을 기획하고 제공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2020년 11월 기준 16.3%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율은 2020년 11월 기준 24.1%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었다. 이러한 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146만 명 중 40만 명 정도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잠재 돌봄 수요자다. 그러나 이중 중증인 22만 명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받는 공적 돌봄 대상자다.
 - 돌봄이 필요하나 공적 돌봄에서 제외된 농촌 노인에게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면 단위에 이러한 대안 돌봄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복지관은 동 지역에 평균 0.2개소가 있지만 면 지역에는 평균 0.01개소만이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동 지역에 평균 1.7개소가 있지만 면 지역에



는 0.5개소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노후 '건강 문제'가 가장 걱정된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어도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농촌 노인이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농촌 노인 돌봄에 있어서 주민과 사회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돌봄 조직을 구성하고, 돌봄을 기획·제공하는 주체가 되며, 시설 부족 때문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직접 돌봄을 제공한다.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1단계 돌봄조직 육성, 2단계 법인 설립, 3단계 돌봄 제공의 단계로 구분된다.
- 충북 진천군은 마을마다 설치된 경로당을 거점 경로당으로 전환하여 동네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거점 경로당은 마을 돌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네 복지사를 배치받고, 편의 시설 개선, 건강증진 프로그램, 방문 의료 서비스 제공 등 프로그램에 우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여럿이 함께 만드는 즐거운 세상'이라는 뜻의 비영리 민간조직인 '여민동락'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농촌 재가노인복지 사업, 노인일자리 복지, 마을 복지사업, 생필품과 먹거리 제공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이러한 면 단위 농촌지역에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돌봄 조직을 구성하고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농촌 삶의 질 이야기 14호

- (제목) 농촌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진료시설 접근성으로 살펴본다
- (구성)
 - 농어촌서비스기준 진료항목 점검방법
 - 농어촌서비스기준 진료항목 점검결과 개요
 - 가장 가까운 병의원까지 걸리는 시간
 - 농어촌 의료 서비스 우수사례
 - * 우리 마을 주치의 <홍성우리마을의료생활협동조합>
 - * 마을 경로당으로 찾아오는 의료진 <진천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 (내용) 도시와 농촌, 어디에 사는지와 무관하게 국민이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가 있다. 농촌 삶의 질 이야기 14호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해 온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중 진료 항목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부족한 의료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례를 살펴본다.
 - 2020년부터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 시행에 따라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진료항목의 국가최소기준에 대해 중요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은 주민이 거주지로부터 30분 이내에 민간·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진료항목 점검 결과, 읍·면이 있는 전체 139개 농촌 시·군 중 89개 시·군에서만 모든 중요과목에 대한 진료를 30분 이내에 받을 수 있었다.
 - 중요 진료과목의 농촌 지역 평균 접근시간은 23.3분이었으며, 군 지역의 접근시간은 28.7분으로 도농복합시의 18.1분과 비교하여 10.6분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 지역은 26.8분으로 읍 지역보다 8.3분, 동 지역보다 21.2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홍성군에 위치한 홍성우리마을의료생활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성군 보건소 공중보건의료 근무했던 의사도 참여하여 우리동네의원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의료건강과 관련된 ‘구석구석 건강교실’, ‘생활건강교실’, ‘어르신 문화교실’ 등 주민의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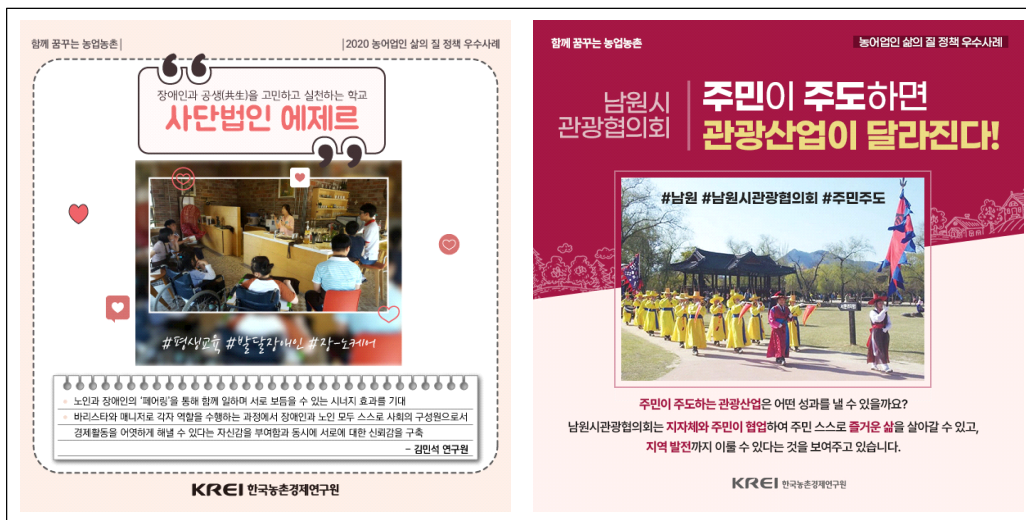
예방 및 진단,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 농촌의 부족한 사회적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농촌 지역사회 등 민간부문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마을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 진천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우리동네거점돌봄센터, 동네복지사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양방·한방 의사가 거점 경로당을 방문하여 주민에게 찾아가는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약사는 복약지도, 물리치료사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는 주민이 살고있는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기 때문에 다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마을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관리하고 마을 외부 보건의료 자원과 소통하는 인력과 경험을 강화하는 것이 통합돌봄 체계 운영을 성공시킨 요인이다.

3.4. 농촌 삶의 질 카드뉴스 제작

❖ 개요

- 2021년부터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 및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사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 사례집」의 일부를 카드뉴스 콘텐츠로 제작하였다.
- 제작한 카드뉴스는 매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식블로그를 통해 소개되었다.
 - 2021년에는 매주 1개씩, 총 46개의 카드뉴스가 제작 및 소개되었다.





❖ 주요 내용

〈2021년 카드뉴스 제작 목록〉

단체명	발간 일자	제목
에제르	21.01.13.	장애인과 공생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학교
안덕면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21.01.19.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안덕면 사랑의 집 짓기 좋은 이웃 사랑의 집 짓기 프로젝트
레클리스협동조합	21.01.26.	문화장벽을 허물다. LOVE IN DMZ LOVE IN DMZ, 다문화카페 레클리스
신풍미술관	21.02.02.	할머니 화가들이 그려내는 농촌의 삶 모두가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나누는 미술관
충남아이키움돌	21.02.10.	“함께하는 보육, 열린 육아” 아이 키우는 부모의 고민에 귀를 기울인 결과물 “24시간제 교육”
도화마을	21.02.17.	제천 수물마을 복사꽃의 기적 환경·경관 산업에서 소득향상까지
풀개 협동조합	21.02.24.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귀농귀촌인들의 중간다리
완주문화재단	21.03.03.	완주 빈집 한 달 살기 프로젝트, 빈집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사람과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문화예술 활동
박하향기 협동조합	21.03.11.	귀촌인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토종 박하보급부터 마을 경관 가꾸기까지
농업회사법인 보령우유	21.03.17.	지역농가가 생산하고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입히다 유기농우유를 통한 건강한 식품을 넘어 지역사회 환원 노력 까지
한빛스쿨팜	21.03.24.	민통선 안의 작은 농장 3D 프리터로 미래를 꿈꾸다 화훼 농장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3D 프린터로 차별화된 농촌 체험프로그램까지
충북 로컬크리에이터 협동조합	21.04.01.	로컬 크리에이터 = 무한한 가능성 로컬 내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고민, 지역의 가치를 재 조명하다
농업회사법인 연호	21.04.08.	더불어 잘 사는 마을을 위한 마을기업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를 위해
춘티문화회	21.04.15.	농촌 어르신들의 작가 도전기 삶이 곧 작품이다
청송해뜨는농장	21.04.22.	기반 없는 청년농부들의 빛이 되다 청년, 농촌 지역사회에 스며들다
호근동 마을회, 치유의 숲	21.04.28.	제주 담은 ‘차롱 치유 밥상’ 오감 만족을 넘어서기 위한 민·관의 협업
무주공동체활성화지원단	21.05.13.	농촌 과소화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노력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
구림 휴(休) 학교협동조합	21.05.20.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탄력’ 시골 마을 ‘활력’ 윤리적 경제 활동으로 교육 공동체 가치 실현

II. 2021년 주요 업무 내용

단체명	발간 일자	제목
정선농산물종합가공센터	21.05.26.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멀티 농업인 육성 6차 산업의 중심, 효자상품 배출로 농가 소득 향상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 조합 구름마	21.06.03.	지리산자락의 예술가들, 농촌에 색채를 더하다 자연의 매력을 발굴하는 문화컨텐츠 생산
교남어유지동산	21.06.10.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 사회적농업에서 찾다 농업은 자립을 위한 희망, 발달장애인의 최고 일터
마을호텔 고한 18번가	21.06.17.	한 집의 변화가 마을의 변화로 고한 18번가 골목의 기적 탄광마을, 호텔이 되다
송면중학교	21.06.23.	마을 어른신과 학생 모두가 위대한 평민으로 자치활동으로 성장하는 학교
제주마을 소도리 문화연구소	21.07.01.	이주민과 원주민이 '흔디(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연구소 주민이 제작하고 주민이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	21.07.09.	소외를 극복한 교류의 장(場) 다문화 이주여성의 고충을 끌어안고,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 지는 다양한 활동
책마을해리	21.07.14.	책을 벗삼은 교육이 실현되는 곳 복합 교육공간으로서의 미래를 꿈꾸다
청년문화협동조합놀자	21.07.22.	청년을 잇다 청년들이 숨 쉬는 젊고 새로운 남원
죽리마을	21.07.28.	사람이 되돌아오는 농촌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성장
치매보듬마을 사업	21.08.05.	치매극복의 열쇠는 '공동체'와 '이웃' 치매가 있어도 우리 동네에서 행복하게
(주)푸마시	21.08.11.	부족한 농촌의 일손, 도시와 손을 맞잡다 사람과 사람의 연결, 푸마시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21.08.19.	농촌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청년과 농촌의 연결, 새로운 도농교류!
덕산초중학교	21.08.25.	함께여서 더 행복한 덕산초중학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21.09.02.	도시 청년 농촌에 활력 불어넣다 청년들만의 문화를 농촌에 입히다
곡성 농업인 재활센터	21.09.09.	농업인의 아픈몸을 지역에서 어루만지다
서당골 문성마을	21.09.15.	마을 가꾸기로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다 소득이 높아진 행복한 농촌마을
금산진생협동조합	21.09.30.	협동으로 만들어낸 수출길 협동조합이 만들어낸 신뢰 해외 판로를 확보하다
남원시관광협의회	21.10.08.	주민이 주도하면 관광사업이 달라진다! 주민이 배우인 '신관사또부임행사'
지오쿱 협동조합	21.10.14.	청년 농부들의 유통 혁신 각자의 개성을 살리며, 연대를 꿈꾸는 청년 농부들
별빛사회적협동조합	21.10.21.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한 농촌유학 학교의 활력이 마을의 활력으로



단체명	발간 일자	제목
두루바른 사회적 협동조합법인	21.10.28.	농촌에서는 받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지역 청년들이 제공합니다 마음·언어 장벽을 허물고 지역과 미래를 꿈꾸다
금광골영농조합법인 동상안전협동조합	21.11.04.	주민 스스로 농촌의 취약한 교통여건을 개선하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버스, 어르신들의 삶이 변하다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	21.11.11.	6차산업을 통해 만들어가는 행복지수 '세계 최고' 마을 척박한 땅을 지역의 명소로 바꾸다
용오름맥주마을협동조합	21.11.18.	토종 홉으로 수제맥주를 만든다! 각자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도전
김천 디딤돌학교	21.11.24.	늦깎이 학생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학교 3년간 교육 더 나아진 삶의 질
미탄주민주식회사	21.12.02.	지역자산을 활용한 농촌형 커뮤니티 지속가능한 성공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21.12.09.	따듯한 기술로 만드는 편리한 농촌 생활 배워서 활용 가능한 농촌 생활기술 교육 보급